

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 제도 개선

An Institutional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s Act

유광흠 Yu, Kwang Heum
임유경 Lim, Yoo Kyoung
염철호 Youm, Chirl Ho
진현영 Jin, Hyun Young

(a u r i

AURI-정책-2013-5

여건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 제도 개선
An Institutional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s Act

지은이: 유광흠, 임유경, 염철호, 진현영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3년 10월 23일, 발행: 2013년 10월 23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8,000원, ISBN: 978-89-97468-69-0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임유경 부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진현영 연구원

¹ 연구보조원 정영진

연구심의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김상호 연구위원
	김동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서기관
	윤혁경 에이엔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창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연구자문위원

김상길	새건축사협의회 상임위원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
박재정	대영회계법인 이사
박준승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부위원장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불어 대표
신춘규	씨이에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전영철	열린모임참건축사사무소 대표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연구요약

제1장 서론

현재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가 산업 전체의 40%에 가까운 매출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25%의 소형 건축사사무소는 연중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인건비를 지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내 건축 산업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여러 설계 회사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나마도 대부분의 매출은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체 산업 규모를 살펴봐도 건설 산업이 거두고 있는 해외 실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축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소위 전문직과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으나 타 전문직 관련법이 회사 형태와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게 건축사법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협정을 통해 시장 개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설계 산업 역시 이러한 행보에 발 맞춰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기존 건축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설계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건축설계 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여 건축사들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건축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사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주요 주제별로 건축사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현안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 전문직 및 산업 관련법과 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과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건축사법은 총 7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삭제된 11개의 조문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3년 12월 16일 최초 제정된 이후 2020년 시행 예정 개정법까지 포함하여 29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제도상의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시기별로 건축사법 관련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건축사법이 신설된 1960년대는 법 제정과 자격 시험 도입 과정의 마찰 문제, 1970년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사 등급제도 폐지, 자격시험 1·2차 구분,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 도입 등이 주요 이슈에 해당했다. 1980년대는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 폐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 신설과 같은 회사 제도 관련 변화가, 1990년대는 성수대교 붕괴와 WTO 체제 출범, 카르텔 폐지와 같은 굵직한 대내외적 변수 발생에 따른 제도적 대응이 주요 사안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비한 제도 확립이 주요한 사항이었다.

개정 과정에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도모’였던 건축사법의 목적이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와 ‘건축 문화 발전에 대한 이미지’로 바뀌었다. 업무 대상 범위는 확대되었고 건축사자격요건이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되었지만 현재의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사라는 전문직만의 업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건축사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건축사가 본

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제3장 건축사 제도 개선 방향 검토

주요 주제별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인 제도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균형발전과 합리적 과세 및 실적 관리를 위해 건축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건축사간 협업을 동시에 보장하는 회사형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실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성과 인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제기되어 왔다. 타 전문직은 이미 법적으로 저마다 고유한 형태의 법인 사무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해외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법인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건축법인 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으로 기존 주식회사인 건축법인을 전문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을 양성화하는 방식, 책임건축사 제도만 도입하는 방식의 3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건축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 구축의 경우는 WTO 및 GATS 가입, UIA 북경총회 건축사자격 국제기준 발표, 한-미 또는 한-EU FTA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약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제도는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UIA 권장안보다는 엄격하고 미국과는 동등한 수준의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FTA를 통한 자격상호인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자격상호인정을 통한 외국 건축사의 국내 업무 수행을 인정하는 수준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건축사공제조합 제도의 경우는 법적으로 설립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실상 건축사협회에 의해 공제조합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타 산업분야는 법적으로 고유한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조문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분야도 보다 원활한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의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 분야 사례를 참조하여 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 건축사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사업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총 6가지 위탁사업이 건축사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비용 보조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타 산업분야 중 일부는 위탁사업의 종류가 건축사법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 징계제도의 경우 건축사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처벌 수준이 다른 전문직과 차이가 나므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4장 건축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및 해설

주요 주제별 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전문직법인 제도 도입은 크게 3가지 대안으로 구성된다. 기존 건축법인을 전문법인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대안은 건축사가 건축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사법 제31조부터 제50조에 걸쳐 그에 따른 설립 절차와 구성 요건 등을 명시하였고,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법인을 양성화하는 두 번째 대안 역시 건축사가 건축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고 건축사법 제31조부터 제46조에 걸쳐 설립 절차 및 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나 첫 번째 대안과 다르게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세 번째 대안은 별도의 건축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건축사법 제23조의3(담당건축사의 지정 등)

만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사에게 설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근거로는 외국 건축사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내에서 건축사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한 건축사법 제18조의4(건축사자격 국가간 상호 인정)를 신설하도록 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적으로 건축사협회와 구분된 별도 법인의 형태로 설립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38조부터 제47조에 걸쳐 공제조합의 설립 요건, 사업, 공제규정 등을 명시하였다. 동시에 건축사협회의 사업 종류를 규정한 제31조의2(사업)에서 공제조합으로 이전된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제20조의1(건축사의 손해배상)을 신설하여 건축사의 공제가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건축사법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징계제도는 건축사법 제52조(과태료)의 일부 기준을 제50조(벌칙)로 옮김으로써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 ‘실무교육’ 용어를 ‘계속교육’으로 변경하였고 건축사들의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대가기준과 관련한 애매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문 개정을 제안하였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축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주제별로 제도의 시대에 따른 변화 과정과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직과 같은 유사 직종의 관련법 및 해외 사례를 국내 건축사 제도와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사법 개정(안)을 조문

별로 작성하고 그 상세한 내용과 기대효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진행되는 수시과제의 특성상 건축사 제도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주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다소 사전에 건축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다루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또 연구 수행 과정 중에 건축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법 개정에 관한 요청사항을 다수 제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진행하였기에 원래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건축사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보다 심원한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건축사법, 건축사, 건축법인, 자격상호인정, 건축사공제조합, 위탁사업

차 례

제1장 서 론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7
1. 건축사법의 개요 및 현황, 문제점 분석	7
2. 여건 변화를 반영한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32
제3장 건축사 제도 개선 방향 검토	33
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 방향	33
1) 검토 배경	33
2) 현황 및 문제점	37
3) 유사사례 분석	40
4)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57
5) 개선대안 검토	64
2.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67
1) 검토 배경	67
2) 현황과 문제점	70
3) 참고사례	73
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77
1) 검토 배경	77

2) 현황과 문제점	79
3) 유사사례 분석	85
4)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92
4.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93
1) 검토 배경	93
2) 현황과 문제점	94
3) 유사사례 분석	95
5. 건축사 징계제도 관련 개선 방향	99
1) 검토 배경	99
2) 참고사례	100

제4장 건축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및 해설103

1. 건축법인 제도 도입	103
1) 대안1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전문법인 전환	103
2) 대안2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양성화	126
3) 대안3 : 책임건축사 제도만 도입	144
2.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148
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150
4.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167
5. 건축사 징계제도 개정	169
6. 기타	174

제5장 결 론179

1. 연구 결론	179
2. 향후 과제	183

참고문헌	185
------------	-----

부록.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	-----

표차례

[표 1-1] 2005~2011년 건축설계시장 및 건설시장 규모	1
[표 1-2] 건축사사무소 현황	2
[표 1-3]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표 2-1] 현행 건축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구성	7
[표 2-2] 건축사법 개정 연혁	9
[표 2-3] 연대별 건축사법 주요 변화	13
[표 2-4] 건축사법 및 관련이슈 변화	14
[표 3-1] 회사규모별 건축설계 산업 현황(2011년)	33
[표 3-2] 건축사사무소 관련 법 변화	36
[표 3-3] 규모별 건축사회 등록 사무소 현황	37
[표 3-4] 관련 법인 및 특별법 제정 시기	41
[표 3-5] 전문직 법인 구성관련 조문 비교	43
[표 3-6] 변호사 수에 따른 법률사무소 현황(2009년 말 기준)	44
[표 3-7] 변호사 수에 따른 법률사무소 세부 현황(2009년 말 기준)	44
[표 3-8] 우리나라 대표 법률사무소 인원 구성(2013년 6월 기준)	44
[표 3-9] 설계회사의 서비스 유형별 등록 요건 - 일리노이주	47
[표 3-10] 미국 20대 설계업체의 회사 형태	48
[표 3-11] 회사 형태간 비교	49
[표 3-12] 회사형태별 법인 수 변화	50
[표 3-13] 협동조합과 기타 법인간 비교	56
[표 3-14] 전문직 사무소 제도의 도입 및 폐지 연혁	58
[표 3-15]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비교	59
[표 3-16] 책임건축사 관련 법 변화	60
[표 3-17]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64

[표 3-18] 건축사자격 국가간 상호인정 관련 법 변화	69
[표 3-19] 건축사자격 관련기준 비교	72
[표 3-20] 건축설계 GATS 양허안 내용	73
[표 3-21] FTA 체결 현황	74
[표 3-22] FTA 협상타결 국가 및 추진현황	75
[표 3-23] FTA 협상진행 국가 및 추진현황	75
[표 3-24]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국가 및 추진현황	76
[표 3-25] 건축사 공제조합 관련 법 변화	78
[표 3-26] 국내 공제 등 유사보험 분류	80
[표 3-27] 연도별 전문건설공제조합 현황	81
[표 3-28]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요사업	81
[표 3-29] 전문직간 공제사업 비교	85
[표 3-30] 타 분야 공제조합 관련 법 현황	85
[표 3-31] 타 분야 법령간 공제조합 제도 비교	89
[표 3-32] 위탁사업 관련 법 변화	94
[표 3-33] 전문직 관련법과 건축사법의 위탁사업 제도 비교	95
[표 3-34] 자격별 위탁사업 경비지원 개요	96
[표 3-35] 비용 보조를 받는 국가자격 위탁사업 예시	96
[표 3-36] 국토교통부소관 자격 위탁사업 비교	97
[표 3-37] 건축사 징계 관련 법 변화	99
[표 3-38] 보고 및 검사 부실 관련 법조문 비교	100
[표 3-39]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 관련 법조문 비교	102
[표 4-1] 건축사법 개정(안) 대안1 조문 목록	103
[표 4-2]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1조	105
[표 4-3]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2조	106
[표 4-4]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3조	107
[표 4-5]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4조	108
[표 4-6]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5조	109
[표 4-7]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6조	111
[표 4-8]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7조	112
[표 4-9]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8조	113

[표 4-10]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9조	114
[표 4-1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0조	115
[표 4-12]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1조	116
[표 4-13]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2조	117
[표 4-14]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3조	118
[표 4-15]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4조	119
[표 4-16]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5조	120
[표 4-17]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6조	121
[표 4-18]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7조	122
[표 4-19]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8조	123
[표 4-20]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9조	125
[표 4-2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50조	126
[표 4-22] 건축사법 개정(안) 대안2 조문 목록	126
[표 4-23]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1조	129
[표 4-24]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2조	129
[표 4-25]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3조	130
[표 4-26]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4조	131
[표 4-27]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5조	132
[표 4-28]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6조	133
[표 4-29]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7조	134
[표 4-30]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8조	135
[표 4-3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9조	136
[표 4-32]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0조	138
[표 4-33]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1조	139
[표 4-34]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2조	140
[표 4-35]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3조	141
[표 4-36]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4조	142
[표 4-37]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5조	143
[표 4-38]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6조	144
[표 4-39] 건축사법 개정(안) 대안3 조문 목록	144
[표 4-40]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3	146

[표 4-41]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148
[표 4-42]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20조	150
[표 4-4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20조의1	150
[표 4-44]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2조	152
[표 4-45]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8조	154
[표 4-46]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8조의2	155
[표 4-47]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9조	156
[표 4-48]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0조	158
[표 4-49]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1조	159
[표 4-50]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2조	159
[표 4-51]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3조	160
[표 4-52]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4조	161
[표 4-5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5조	163
[표 4-54]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6조	165
[표 4-55]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7조	166
[표 4-56]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167
[표 4-57] 건축사 징계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30조의3	169
[표 4-58] 건축사 징계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50조	170
[표 4-59] 건축사 징계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52조	173
[표 4-60] 실무교육 용어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18조의2	174
[표 4-61] 실무교육 용어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0조의2	174
[표 4-62] 업무실적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175
[표 4-63] 건축사 대가기준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	176
[표 4-6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조건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177

그림차례

[그림 3-1] 미국 설계회사의 유형별 구성('03 AIA Survey)	46
[그림 3-2] 일리노이주 전문설계회사의 사업체 유형 및 서비스 분야	47
[그림 3-3] 회사의 인격적 위상	49

제1장 서론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산업구조 및 시장환경의 변화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설계산업 시장은 약 4.9조원 규모(통계청)로 건설 시장의 약 2.5%이고, “서울이 전 세계 2,077개 도시 중 13번째 규모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음¹⁾”

[표 1-1] 2005~2011년 건축설계시장 및 건설시장 규모

연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건축설계시장 (조 원)	4.0	5.4	3.8	4.9	(추정치)
건설시장 (조 원)	155	171	195	196	(건설투자액)
비율(%)	2.6	3.2	1.9	2.5	

※ 출처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1)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

* “국내 건축설계산업 경쟁력은 IT기반 행정(세움터), 건설기술력(초고층 건축물 등) 등 관련 산업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반하여²⁾, 건축설계산업 매출 규모는 OECD 국가 27개국 중 21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직원수가 100인 이상인 대형사무소(상위 1.3%)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소형사무소(하위 25%)는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 극심
 - 약 1만개의 건축사사무소 가운데 보유 건축사 수가 1명 이하인 사무소가 전체의 90%가 넘으며, 직원 수 1명 이하의 설계사무소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1,500위 이하에 해당하는 사무소들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

* 건축설계 업체당 매출 규모는 OECD 국가 21번째로 하위권(평균의 58.5%)

[표 1-2]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보유건축사 수	1인	2인	3인 이상	합계
사무소 수	7,823	320	106	8,249
비율(%)	94.8	3.9	1.3	100.0

※ ‘13.8.20 기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무소 대상(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포함)

- 해외건설부문의 급성장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진출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건축설계업체의 경우 해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2013 ENR 225대 기업에 11개사가 포함³⁾
 - 현대엔지니어링(36위), 한국전력공사(66위), SK건설(68위), 포스코건설(124위), 포스코엔지니어링(147위), 도화엔지니어링(150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173위), 건화(196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197위), 삼안(199위), 유신(204위)이 이에 해당
 -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설계산업의 해외진출 현황은 대형 설계사무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소형 설계사무소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움

*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세계 150대 설계·ENG 업체에 속한 우리나라 업체는 5개(한국전력공사, 현대엔지니어링, SK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삼

2)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

3) ENR(2013),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실제로 건축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는 삼우 한 개에 불과⁴⁾

□ 여건변화에 따른 건축사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한미 FTA(2012.03.15) 결과, 건축설계산업은 국가간 전문직 상호자격인정을 통해 자국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대국에서도 같은 직종을 가질 수 있게 됨(한미 FTA 제12장, 부속서 12-가)

– 따라서 건축사는 해외진출의 기회와 동시에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제도적 지원 및 개선방안이 요구됨

- * 국토해양부(전)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에 걸맞도록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을 개정(11.05.30 공포, 12.05.31 시행)

-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갱신 및 등록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12-가(전문직 서비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해 상호 합의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그러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는 부록 12-가-1에 열거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부록 12-가-1(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 건축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직의 특성을 일부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업역 특성을 반영한 회사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음

– 현재 건축사사무소 형태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법인건축사사무소가 2,084개로 전체의 약 25.3%를 차지('13년 8월 기준).

- * 전체 건축사 수는 8,861명이며, 건축사사무소 수는 8,249개임(2013년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기준)

- ** 1998년 IMF 당시 개설키만 10년 미만의 건축사사무소의 67%가 폐업

4) ENR(2013), *The Top 150 Global Design Firms*.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의 타 전문직은 전문직 법인을 통해 각 전문가가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자적 수행이 힘든 업무는 협동하여 대응
- 다양한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들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들이 저마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회사형태의 도입이 필요

□ 건축사제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 건축설계산업이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전과 품격 등 사회적·문화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제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 대두

“ 건축사는 사회의 흐름에 대해 적응하며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활동과 역할을 규정하는 건축사법은 현실적인 사회적 흐름과 무관할 수 없으며 가장 첨예하게 사회를 반영해야 하는 건축 관련법인 것이다. (중략) 건축사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건축의 발전을 지향하며, 모든 건축사의 개인적 존재감을 확보하고 건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사회적 흐름에서 건축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서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김상길(2009), “건축사법의 새로운 쟁점들”, 「건축과사회」, 2009 봄, pp.48~58.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건축설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전과 품격 등 사회문화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산업의 국내외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건축사 제도 개선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표 1-3]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자(년도): 유광흠 외(2011) -연구목적: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선진화방안 제시	-정보·문헌자료 조사분석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전문가 방문 및 담당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및 분야별 합동 워크숍 개최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해외사례 -관련산업과의 동반 성장전략 제시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시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제시
	2 -과제명: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자(년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연구목적: 건설산업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문헌조사 및 관련 제도검토 -건설산업 통계 조사 및 분석	-건설산업동향 조사 -건설산업 관련 제도 분석 -주택·부동산 시장 조사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방안제시
	3 -과제명: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김진욱 외(2009) -연구목적: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 파악	-문헌조사 및 법규검토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통계청 및 관련부처 업무협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 개념정의 -산업동향 조사·분석 -산업의 활성화 방안 제시
	4 -과제명: 건설분야의 향후 정책 과제 -연구자(년도): 이승우 외(2007) -연구목적: 국가 건설정책 수립의 방향성 제시	-문헌조사 및 법·제도 검토 -건설산업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기존 국가건설정책의 평가 -건설산업 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도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 제시
	5 -과제명: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건설교통부(2006) -연구목적: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응 및 지원방안제시	-해외건설협회와 학계간 협동연구 -통계자료 및 관련문헌 검토 -동남아 지역 진출업체 실태 조사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관심도 설문	-중소건설업체의 개념정의 -중소건설업체 실태 및 경쟁력 분석 -해외진출의 문제점 분석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6 -과제명: 해외건설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연구자(년도): 박환표(2006) -연구목적: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응 및 지원방안제시	-법제도 및 관련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선진국의 해외건설 지원시스템 조사 -선진국의 해외건설 수주경쟁력분석 -국내의 해외건설지원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외건설 지원기반 구축방안 마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 방안 -연구자(년도): 이의섭 외(2004) -연구목적: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균형발전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및 관련 문헌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및 분석 -해외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 건설업체 시장 점유율 현황 -국내 발주제도 현황 -해외 발주제도 사례 (미국, 일본, 독일) -대중소 기업의 균형발전 방안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 제도 개선 연구〉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문헌 및 법제도 조사 -해외 선진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및 workshop,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건축설계산업 실태 조사 -국내 건축설계산업 현황 분석 및 과업추진 방향 설정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제2장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1. 건축사법의 개요 및 현황, 문제점 분석
2. 여건변화를 반영한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1. 건축사법의 개요 및 현황, 문제점 분석

1) 건축사법 주요 내용

- 현행 건축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은 총칙(1장), 자격(2장), 건축사자격시험 및 등록(3장), 업무(4장), 건축사사무소 및 징계(5장), 건축사협회와 보칙(6장), 벌칙(7장)과 관련하여 총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조문 중 11개 조문은 〈삭제〉 상태임

[표 2-1] 현행 건축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구성

구분		조문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삭제<1977.12.31>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삭제<2011.5.30>	
제2장	자격	제6조	삭제<1977.12.31>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	자격	
		제9조	결격사유	

구분		조문		비고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장	건축사 자격시 험 등	제13조	실무수련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삭제<2011.5.30>
		제1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	시험과목 등	
		제16조의2	삭제<2011.5.30>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신설<2011.5.30>
제3장 의2	자격등 록 등	제18조의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	자격등록의 취소	
제4장	업무	제19조	업무 내용	
		제19조의2	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	설계도서 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삭제<2000.1.28>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계속	
제5장	건축사 사무소 등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삭제<1995.1.5>	
		제24조	신고의 제한	
		제25조	삭제<1995.1.5>	
		제26조	삭제<1999.2.5>	
		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조의2	청문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	보고·검사 등	
		제30조의2	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 의2	징계	제30조의3	징계	신설<2011.5.30>
		제30조의4	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건축사 협회	제31조	건축사협회	
		제31조의2	사업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제33조	삭제<2011.5.30>	

구분		조문		비고
		제34조	삭제(2011.5.30)	
		제35조	위임규정	
		제36조	「민법」의 적용	
		제37조	삭제(2001.8.14)	
		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제38조의2	감독	
제6장 의2	보칙	제38조 의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종전의 42조는 제40조로 이동(2011.5.30)	
		제42조	삭제(1984.12.31)	
부칙		제1~7조		

2) 건축사법 개정 연혁

- 건축사법은 1963년 12월 16일 제정된 이후, 2020년 시행 예정인 건축사법(법률 제10756호, 2011.5.30 일부개정)에 이르기까지 29차(19차례의 일부개정과 10차례의 타법개정)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음

[표 2-2] 건축사법 개정 연혁

법률번호	시행일자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 사항
법률 제1536호	1963.12.16		제정	-
법률 제3074호	1978.07.01	1977.12.31	일부 개정	·건축보조사제 신설 ·건축사 등급 폐지, 결격사유 보완, 건축사면허취소 요건 추가, 자격시험 응시 실무경력 연한 인상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근거 명문화
법률 제3242호	1980.04.01	1980.01.04	일부 개정	·건축보조사를 건축사보로 개칭, 건축공사현장에서 의 공사감리보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대학졸업자 실무경력 없이도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중합건축사사무소 관련 사항 규정

법률번호	시행일자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 사항
법률 제3559호	1982.07.01	1982.04.03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만이 설계 또는 공사감리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대상과 일치 ·단독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도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 가능 ·건축사협회 기능 강화 ·일정 경력 이상 건축직공무원의 건축사 특별전형 규정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취득년한 하향조정
법률 제3767호	1985.01.01	1984.12.31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종류 단순화 ·종합건축사사무소 기술집약화 및 대형화 유도 ·법령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 추가, 등록 건축사사무소의 폐쇄제도를 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축사개인에 대한 업무정지제도로 전환
법률 제4116호	1989.04.01	1989.04.01	일부 개정	·건축직공무원 특별전형시험에 의한 건축사면허취득제도 폐지하는 반면 건축사면허 시험과목 중 일부 면제
법률 제4381호	1992.06.01	1991.05.31	타법 개정	·건축법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법률 제4501호	1993.05.26	1992.11.25	타법 개정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법률 제4918호	1995.07.01	1995.01.05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건축사 확보 위해 건축사시험제도 개선 ·건축사사무소등록제도 개선 : 단독,종합 구분 폐지, 외국건축사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률 제5238호	1996.12.30	1996.12.30	일부 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업무범위 위반시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 삭제(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법률 제5454호	1998.01.01	1997.12.13	타법 개정	·건설업법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5735호	1999.01.29	1999.1.29	일부 개정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자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자격취득 후 9년 실무경력 또는 건축사보 7년이상 근무한 경우)
법률 제6244호	2000.04.29	2000.01.28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 조성,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건축사 자격제 일원화, 설계도서의 건축사협회 신고 의무 폐지, 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등록갱신 폐지,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

법률번호	시행일자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 사항
법률 제6503호	2001.08.14	2001.08.14	일부 개정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고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유지,관리하여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 제공하여 기술능력과 업무실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건축사업무수행실적관리제도 도입 제19조의2)
법률 제7593호	2005.07.13	2005.7.13	일부 개정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예정자에게도 부여
법률 제7593호	2007.12.21	2007.12.21	일부 개정	·개인파산제도 활성화,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유지할 수 있도록 함, 영업활동을 위한 건축사업무신고 제한요건에 파산선고받은 자 추가 :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 제고 ·건축사자격심의회위원회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법률 제8852호	2008.02.29	2008.2.29	타법 개정	·정부조직법
법률 제8974호	2008.03.21	2008.03.21	일부 개정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법률 제9187호	2009.03.27	2008.12.26	일부 개정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존치시켜 활용
법률 제10250호	2010.10.13	2010.04.12	타법 개정	·엔지니어링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 제10392호	2011.01.24	2010.07.23	일부 개정	·건축사가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
법률 제10756호	2011.05.30	2011.05.30	일부 개정	·건축사자격시험제도 개선 :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실무교육 강화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함. 개설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법률 제10719호	2011.11.25	2011.05.24	타법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756호	2012.05.31	2011.05.30	일부 개정	·2011.05.3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제12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03.23	2013.03.23	타법 개정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법률 제11794호	2014.05.23	2013.05.22	타법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건설기술진흥법

법률번호	시행일자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 사항
법률 제10756호	2020.01.01	2011.05.30	일부 개정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01.01부터 시행

3) 건축사법 개정관련 주요 논의

□ 조사개요

- 건축사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
 -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연혁 정리 : 1963년 12월 16일 제정 후 2013년 3월 23일까지 28차례에 걸쳐 개정된 「건축사법」과 41차례에 걸쳐 개정된 「건축사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시간 순으로 정리
 - 언론보도자료, 정기간행물, 논문에서 거론된 「건축사법」 관련 주요 논의내용 정리
- * 언론보도자료는 네이버(<http://www.naver.com>)에서 건축사법 관련 키워드⁵⁾로 196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7월 1일까지 보도된 각종 언론매체⁶⁾ 기사 검색 결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
- ** 정기간행물과 각종 논문자료는 DBpia(<http://www.dbpia.c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iss.kr>),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http://www.ndsl.kr>)에서 위와 같은 기간에 게재된 건축사법 관련 문헌을 검색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

□ 건축사법 시기별 주요 개정 연혁

- 1960년대 : 건축사법 신설
 -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정한 건축사법 신설
 - 1회 건축사자격시험에서 특혜 논란이 일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혜 폐지

5) 검색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 ‘건축사법’, ‘개정’, ‘건축사협회’.

6) 총 13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목록은 다음과 같다. 건설경제, 건축사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법률신문,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헤럴드경제.

- 1970년대 : 새로운 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
 - 1급, 2급 건축사 등급제도 폐지
 -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는 등 자격시험제도 변경
 -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유도를 위한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 도입
- 1980년대 : 건축사사무소 형태 변경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례 제한 등 작은 변화
 -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 폐지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 운영
 - 건축직공무원에 부여하던 시험특례 폐지
- 1990년대 : 성수대교 붕괴, WTO체제 출범, 카르텔 폐지 등 다양한 대외적 변수발생과 그에 따른 대응
 - 부실공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제사업 규정 신설, 징계 강화 등 법 개정
 - 시장개방 상황에 맞춰 건축사 제도 전면적인 개편 움직임 시동
 - 보수기준을 명시하여 가격담합소지가 있는 건축사 보수기준 철폐
- 2000년대 이후 :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을 위한 제도 확립, 건설회사 설계허용 문제로 인한 갈등
 - UIA 건축사자격 국제기준을 만족하는 교육, 시험, 등록 제도 등 도입
 - 건설회사에 대한 설계허용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 추진에 건축사들 반발

[표 2-3] 연대별 건축사법 주요 변화

시기	법 주요 변화	관련 이슈
1960년대	•건축사법 신설 -건축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의 적절한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특혜시비 •건축사법 개정요구(등급제 폐지, 업무범위 확대, 설계사무소 법인화 허용, 시험제도 개선)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1970년	•등급제 폐지	•경기침체로 인한 합동사무소 운영 차질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 신설 -건축사사무소 전문인력의 확보 꾀함 •자격 및 시험제도 개선 •합동사무소 규정 신설 -사무소 대형화 유도, 상대적으로 단독사무소의 업무범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업무 보수요율문제 제기
1980 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규정 변경 •종합건축사사무소제 도입 •협회 활성화 도모 •업무범위 확대 •합동사무소 규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지원책 필요 •보수교육 개선 필요 •자격시험 개선 요구 -공무원 특혜 저지
1990 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종합사무소의 업무범위 차별화 삭제 •외국건축사 업무 허용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범위 확대 •벌칙 강화 •협회의 공제사업 등 사업관련조항 신설 •연수교육대상 확대 •협회 위탁규정 신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조건 완화 •건축사 보수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유도 •성수대교 붕괴와 건축 관련법 조정 •건설업체의 설계업무 진출 시도와 저지 노력 •WTO , GATS 가입과 설계시장 개방 •공제조합 설립 무산과 협회의 공제사업 실시 •UIA 건축사자격 국제 기준 발표
2000 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자격제도 일원화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건축사사무소 운영 간편화, 자율권 확대 •건축사업무신고 기준 완화 •협회가입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 •건축사 시험 응시조건 변경 •업무실적관리제도 신설 •협회설립기준 상향조정 •응역범위 및 대가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을 위한 제도 마련 노력 •건축사법 유명무실화 논란 •5년제 건축학과정 실시 •APEC 등록건축사 등록 개시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논란 재점화
2010 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또는 공제 강화 •자격시험 및 관리제도 강화 •협회 위탁규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건축사등록원 설립 •연금제도 요청

□ 건축사법 개정관련 논의 전반

[표 2-4] 건축사법 및 관련이슈 변화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1961. 8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초안 제출 ⁷⁾	
1961. 11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건축사법초안 제출 ⁸⁾	
1963. 12	제정 (1963.12.16시행)	•건축사법 신설		

시 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1965. 3	시행령 개정 (1965.3.4시행)	●건축대서사에 대한 시험면제 특혜제공	●젊은 건축인, 건축사법 시정요구 ⁹⁾ -건축대서사에 대한 특혜 시비	
1965. 4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보이콧 선언 ¹⁰⁾ 11) -건축대서사에 대한 특혜 시비 ●건축사자격시험 재검토 요구 ¹²⁾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실시와 시험 보이콧(1965.4.25) ¹³⁾
1965. 10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1966. 12			●건축사법 개정 요구 ¹⁴⁾ -건축준공검사신청시 감리인장 날인 의무화 필요 -법인 건축사사무소 설립 허용 필요	
1967. 3	시행령 개정 (1967.3.8시행)	●자격시험 과목면제제도 폐지		
1967. 11			●건축사 업무범위 확대 요구 ¹⁵⁾ -설계활동을 10평방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 ●1,2급 건축사제도 폐지 요구	
1969. 10	시행령 개정 (1969.10.20시행)	●건축대서사 특혜 폐지		
1970. 7			●건축사법 제22조(설계도서의 등록) 폐지 반대 ¹⁶⁾ -비효율 문제등으로 등록제도 폐지 논란	
1970. 11				●서울시, 자질향상 위해 영세 건축사사무소의 통합 중용 ¹⁷⁾
1974. 11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법개정건의서 ¹⁸⁾ 제출 -건축사 등급제도 폐지 -자격시험 응시자격 강화 -면허업무한계 상향조정 -건축사협회임원의 증원 -피고용인으로서의 업무행위 제한 -검정행위의 제한 -대통령령에 의한 법령 보완 필요 -제재처분에 있어서 청문 필요 -보수교육 도입	
1975. 5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법 개선 기고 ¹⁹⁾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자격시험 개선(설계과목 배점 상향조정, 과목면제제도 부활, 기출문제 공개, 단순암기문제 지양)	
1976. 7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를 통해 보수요율 담핑현상 해소 기대 ²⁰⁾
1977. 12	개정 (1978.7.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등급제도 폐지, 보조사 신설 ●건축사자격 및 시험제도 변경 ●합동건축사사무소(법인) 규정 신설 ●설계도서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별칙규정 대폭강화 ●건설부장관의 협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 ●법 권한 일부 자자체장 위임규정 신설 ●등록취소 후 업무계속에 관한 규정 신설 		
1978. 10	시행령 개정 (1978.10.6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시험 변경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 -건축설계과목 200점 만점으로 상향조정 -외국건축사 시험시 법규과목 의무(필요시 설계과목 추가) -건축사공 및 구조 기술사에 일부시험과목 면제 특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의 특수건축물 설계 및 감리 허용 		
197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침체로 합동건축사사무소 난항²¹⁾ -법적제한으로 인해 설계대상 확보에 차질
1979. 5			●설계업무 보수 요율의 문제 및 해결방안 제시 ²²⁾	
1979. 11	시행령 개정 (1979.11.5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시험 변경 -시험과목 조정 -건축설계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향조정 -외국건축사의 자격시험시 설계과목 의무화 		
1980. 1	개정 (1980.4.1시행)	●건축보조사를 건축사보로 개칭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건축사사무소제 도입 		
1982. 4	개정 (1982.7.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응시자격 완화 ●건축사보 시험응시자격 폐지 ●건축직공무원 특례 신설 ●합동건축사사무소 업무범위 확대 ●건축사협회 활성화 ●보수교육 위탁규정 신설 		
1984. 12	개정 (1985.1.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형태 및 기준 조정(합동사무소 폐지) ●건축사보 자격 완화 ●시험 응시자격 강화 ●무조리 적결 위한 행정체제 강화 ●벌칙 합리적 조정 및 강화 ●면허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 강화 		
1984. 12	개정 (1985.1.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 폐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제한 폐지 		
1985. 6	시행령 개정 (1985.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시험 건축사과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단독/합동/단독종합/합동종합 네 가지 건축사사무소를 단독/종합으로 이원화하여 등록경선²³⁾
198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활성화 방안 제시²⁴⁾ -당국의 육성책 필요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유도 -대형회사의 건축사 업무 잠식 근절 	
198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자격시험의 건축사과목에 대한 제언²⁵⁾ -출제 범위 등 	
1987. 1				●건축사연금제도 실시 ²⁶⁾
198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보수교육 유연화 주장²⁷⁾ -획일적인 교육규정의 개선 필요성 역설 	
198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시험 개선 요구²⁸⁾ -공무원에 대한 특혜제공 비난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시험 개선 요구²⁹⁾ 	

시 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3			-협회의 시험관리 참여 허용 -출제자 편의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지양	
1988. 4			●건축사협회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 요청 ³⁰⁾	
1989. 4	개정 (1989.4.1시행)	●외국건축사의 자격시험시 특례		
1990. 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에 관한 토론회 개최 ³¹⁾ -실무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필요 -합격 후 실무수련 2년과 면접 도입 -경력기준 세분화 및 강화 -실기과목 예고제 폐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구분 -1차시험 합격자적 유효기간 연장	
1990. 10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통합 제언 ³²⁾	
1992. 10			●건축사법 개정 계획 ³³⁾ -감리기능 보강, 부실건축 방지를 위해 인력난 해결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전문화 유도 -건축사연금제도를 공제조합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1992. 11	개정 (1993.5.26시행)	●무등록업무 금지조항 축소		
1993. 2			●건축사협회 제도개선 추진 ³⁴⁾ -자격과 면허 구분(건축사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거친 뒤 면허 발급) -건축사사무소 업무구분 폐지	
1993. 4			●건축사법 개정예고에 반발 ³⁵⁾ -감리법인제도 신설 반대 -부실시공과 감리에 대한 처벌규정의 재조정 요구 -부실설계등의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손해배상제 반대 -감리전문회사제 반대 -설계업체 대형화 유도 반대	
1993. 5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출범 ³⁶⁾ -건축사사무소 개설한 건축사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가입 가능
199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자격시험 개선에 관한 논의³⁷⁾ -건축3단체에 의한 시험전담기구 설립 필요 등 	
199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체의 설계업무 진출시도 반대³⁸⁾ 	
199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공사 추방위해 처벌규정 강화 추진³⁹⁾ ●건설부가 보험제도 강화 추진⁴⁰⁾⁴¹⁾ -재해처리가 용이하도록 공제사업 및 보험제도 관련조항 신설 계획 	●성수대교 붕괴(1994.10.21)
199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감리자에 대한 제언⁴²⁾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감리본야가 감당해야 할 역할 제시 	
1995. 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995.7.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감리 조문 신설 -특정 영역에 대한 설계감리 의무화 		●대한민국 WTO , GATS 가입(1995.1.1)
	개정 (1995.7.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종합사무소의 업무범위 차별화 삭제 ●외국건축사 업무 허용 ●건축직공무원 특례 폐지 ●건축사예비시험 신설 및 자격시험응시자격 확대 ●시험부정행위자 처분조항 신설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확대 ●벌칙 강화 ●협회의 공제사업 등 사업관련조항 신설 ●연수교육대상 확대(소속건축사/건축사보 포함) ●보수기준위반 처벌규정 신설 ●협회 위탁규정 신설(건축사보신고, 자격시험, 외국건축사 업무수행신고) 		●국내 설계시장 개방
199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 가입요건 완화를 위해 회원규정 개정 추진⁴³⁾ -사무소 미개업자에게도 협회가입 허용하도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헌 판결⁴⁴⁾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는 사무소등록취소는 위헌
199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워진 협회운영 정상화위한 노력⁴⁵⁾ 	

시 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연급제도 폐지 -공제사업 도입위한 타당성조사	
1995. 7				●건축사 감리 소홀 심각 ⁴⁶⁾ -건축사들의 법규위반 행위 80% 이상이 감리부실
1995. 9	시행령 개정 (1995.9.2시행)	●자격시험 변경 -건축설계과목 200점 만점으로 상향조정(부실설계 방지) -시험과목 조정 -외국건축사의 자격시험시 설계과목 면제		
1996. 10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 요구 ⁴⁷⁾ -시험의 독자성, 공신력 확보 -공정한 예비시험면제 제도 확립 -외국건축사의 시험과목면제 조정 -자격상호인정 대비한 시험제도 마련 -시험관리를 위한 건축계 내부기관 설립	
1996. 12	개정 (1996.12.30시행)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사사무소등록 필요취소 요건 중 제2호 업무범위위반행위는 제외		
1997. 3				●보수기준을 설정한 카르텔제도 대수술 예고 ⁴⁸⁾ -전문직 담합구조 개선
1997. 7			●건설업체의 설계허용 추진에 반대 ⁴⁹⁾	
1997. 8			●건축사협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 ⁵⁰⁾	
1997. 9			●건설업체와 설계범위 문제로 이견 논란 ⁵¹⁾ -건설사가 그룹소유건물 설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발	
1997. 12	개정 (1998.1.1시행)	●청문실시에 관한 조항 변경 -건축사면허, 건축사사무소등록 취소의 경우		
1998. 4			●공제조합 설립관련 개정안 입법 추진 ⁵²⁾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행위 제한적허용 추진 ⁵³⁾ ●개안법인사무소 차별을 통한 법인의 대형화 유도 ⁵⁴⁾	
1998. 7				●보수기준을 설정한 카르텔제도 폐지 예고 ⁵⁵⁾

시 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변호사등 전문직 보수 자율화 추진
199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협회 공제사업 추진⁵⁶⁾ -공제조합 설립이 무산되어 협회 내 공제담당부서 신설 	
199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사업 필요 주장⁵⁷⁾ 	
199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보증보험(주) 출범⁵⁸⁾ -설계감리보증보험 등 제공
1999. 1	개정 (1999.1.29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 		
1999. 2	개정 (1999.2.5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보수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기준 폐지로 과다경쟁, 무리한 덤핑 등 건축설계시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⁵⁹⁾60)61) 	
199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공제업무 전담부서 신설⁶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UIA 북경총회에서 건축사자격 국제 기준 발표⁶³⁾ -이로 인해 국내 5년제 건축학과정 논의 촉발
199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보수기준 필요 주장⁶⁴⁾ 	
199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IA의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 수용 주장⁶⁵⁾ -건축사등록원 설립 등 제도개혁 촉구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⁶⁶⁾ -수련제도 구체화 등의 개선 -면허와 등록 단일화 등의 개선 -계속교육 강화 	
2000. 1	개정 (2000.4.29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자격제도 일원화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건축사사무소 운영 간편화, 자율권 확대 -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5년 마다 사무소 등록 갱신제 폐지 ●협회설립 및 가입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당해 건설회사 및 계열사 건축물 설계 허용 		
2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신고제 폐지, 협회가입 임의화 옹호 주장⁶⁷⁾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을 위한 	

시 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⁶⁸⁾	
2000. 5	시행령 개정 (2000.5.10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자격시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계획과목(실기) 신설 -기존의 건축법규과목은 예비시험으로 편입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신고제 폐지로 건축사 업무실적의 객관적인 통계 등 자료구축 불가 야기^{69/70)} 	
200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강화 예고⁷¹⁾ -2005년부터 전문대졸 후 2년 경력자나 대졸자로 제한 -건설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예비시험 면제 폐지 	
200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법 제38조 개정 요구⁷²⁾ -협회설립기준 상향조정 필요(35년동안 개정하지 않았음) 	
200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법 유명무실화 논란^{73/74)} -건축사를 건축사법이 아닌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 발표 	
200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JIA의 교육인증제도 전면적 시행⁷⁵⁾ ●5년제 건축학부과정 도입⁷⁶⁾
2001. 8	개정 (2001.8.14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시험 응시자격 변경 ●업무실적관리제도 신설 ●협회설립기준 상향조정(제38조) ●용역범위 및 대가기준 신설 		
200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개악추진 저지^{77/78)} -건설회사의 설계/시공/감리 통합 수행 허용안 저지 	
2002.				●JIA의 건축사 상호인증 기준이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
2002. 3	시행령 개정 (2002.3.18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 위탁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관리 ●일부 시험과목 명칭 변경 		
200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건축사회 회장, 법 개정건의안 제출⁷⁹⁾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목적 	
200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공식출범⁸⁰⁾ -3단체(대한건축사협회,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로 구성 -UIA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국제무대에서 활동
2003. 10				●새건축사협의회 창립 ⁸²⁾ -2000년, 2001년 법 개정으로 새 협회 설립 가능해짐 -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자각상호인정문제 해결 등 목적(건축3단체의 소극적 대응 문제시)
2004. 5			●설계건축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도 모두 도맡아야 함을 주장 ⁸³⁾	
2004. 7				●새건축사협의회 국토해양부 법인인가 ⁸⁴⁾
2005. 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출범 ⁸⁵⁾
2005. 2			●건축사예비시험 자격완화 추진 ⁸⁶⁾ -건축학과 졸업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도록 개정	
2005. 3			●공정위의 건축사법 대가기준 폐지 재추진에 반발 ⁸⁷⁾ -설계감리시장의 보호제도 존치 필요 역설	
2005. 7	개정 (2005.7.13시행)	●응시자격 완화 -건축학과 졸업예정자도 예비시험 응시가능		
	시행령 개정 (2005.7.18시행)	●과목면제제도 부활 ●일부 시험과목 및 배점 조정		
2005. 9				●APEC 등록건축사 등록 개시 ⁸⁸⁾ -4년제 이상의 건축교육, 건축사경력 7년 이상 등 필요
2005. 10			●건설업체 설계겸업 논란 재점화 ⁸⁹⁾ -건교부의 제한적 허용 방침에 건축사협회 반발	
2006. 2			●건축사등록원 설립 요구 ⁹⁰⁾ -법적근거 마련 필요	
2006. 5			●설계감리제도 도입 제안 ⁹¹⁾	
2006. 6			●건축사등록원의 수련건축사 등록제도 제안 ⁹²⁾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강화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수련건축사의 등록요건 강화(특히 교육 측면) -타 분야/시공분야에 대한 시험특례제공 폐지 ●수련건축사제도 개선 요구 ⁹³⁾ -수련건축사의 교육에 대한 검증과 업무 내용에 대한 관리 필요 -수련내용에 부합하는 시험문제 출제 ●기존 건축사 등록문제 해결방안 제시 ⁹⁴⁾ -내부의 자정기능을 통해 적격자 가려질 것 ●건축사등록원 설립 요구 ⁹⁵⁾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등록원 설립 필요 ●실무수련제도 도입 요구 ⁹⁶⁾ ●건축사등록원 건교부관리 내지 별도법인설립 주장 ⁹⁷⁾ -피인증자가 인증자가 되는 모순 방지	
2006. 8			●건축사등록원 별도법인설립 반대 주장 ⁹⁸⁾⁹⁹⁾ -협회의 유명무실화를 막도록 협회를 통한 운영이 적합	
2007. 2				●건축사협회 과천에서 건설사 설계업 허용 반대시위(8000명 참석) (2007.2.1)
2007. 12			●건축사법 개선 요구(1) ¹⁰⁰⁾ -현상설계경기와 관련한 규정 필요 -법인 내 건축사의 독립적인 법적지위 확보 -건축사등록원의 역할 강화 필요 ●건축사법 개선 요구(2) ¹⁰¹⁾ -5년제 교육제도 및 자격관리제도 등과 조화 -건축사의 윤리성과 실천 명기 -건축사 업무범위 확대 -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사등록원등의 규정 반영	
2007. 12	개정 (2007.12.21시행)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제도 신설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p>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통합 추진¹⁰²⁾¹⁰³⁾ -유일한 법정단체인 사협회가 건축사등록원 담당 주장 -새건협, 가협회가 별도법인설립 주장하며 대립 -사협회가 비용부담 자처하자 국토부 긍정적 반응 -새건협, 가협회가 새로운 법정 건축사단체인 한국건축사협회 발기인 대회 개최 -위협을 느낀 사협회가 세 단체 통합 제안 -건축사법 개정 이전까지 통합 합의</p>	
2008. 5				<p>●자격시험 응시자격요건 합헌 결정⁰⁴⁾ -대졸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필요 인정</p>
2008. 12	개정 (2009.3.27시행)	●공공발주사업에 한해 대가기준 적용		
2009. 3			<p>●건축사에 대한 계속교육 요구¹⁰⁵⁾ ●독일 건축사법과 비교¹⁰⁶⁾ -국제건축가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근거 마련 -공제제도 구체화 -징계관련 법률 체계화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 요구¹⁰⁷⁾ -금감원 관리부담 가중+재경위 반대입장, 그러나 필요 ●법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 역할에 대해 제언¹⁰⁸⁾ -제도미비로 인한 5년제 졸업생의 불이익 예방 -법 개정에 따르는 건축사 등록 사전 준비 -건축사 의무교육을 위한 제반 업무 -건축사등록원은 협회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법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대학원 역할에 대한 제언¹⁰⁹⁾ -4년제 건축학부 교육과 건축대학원 시스템 정립 필요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¹¹⁰⁾</p>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200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사 설계허용 불가 주장^{H11)}^{H12)} -법 개정에 따른 설계시장 잠식 우려 	
200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통합안에 대한 논란^{H13)} -건축사법에 따른 법인으로서의 등록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동시 등록 문제 -대한건축학회 누락 문제 -통합협회인 대한민국의 건축사협회 명칭 문제 등 	
2009. 6	시행령 개정 (2009.7.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업무신고 기준 완화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와 건축사의 공동법인 설립 인정 		
200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규정 폐지 반대^{H14)} -법 제23조제4항 삭제 예고에 반발 ●건설업체 설계시장 진입허용 예고에 반대^{H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감리공제조합 출범^{H16)}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 가입 가능(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경우도 앞의 법 준용해야 함)
200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규정 폐지 무산^{H17)} 	
200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경부의 입법예고안 반대^{H18)}^{H19)} -특정한 경우 법 제23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반대 ●건설사 설계검열 반대^{H20)} -아파트, 대형건축 시장독과점 우려 	
200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의 법적지위 강화 요구^{H21)} -업무범위 확대 필요(경관설계/환경디자인/도시설계) 등 	
200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협회 임시총회에서 건축3단체 통합 부결^{H22)}
20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체의 설계업무 허용안 반대^{H23)} 	
2010. 7	개정 (2011.1.24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또는 공제 강화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가입 의무화 -공제사업 범위 확대		
2010. 11			●건축사 공제사업 참여 촉구 ⁽²⁴⁾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활성화 기대	
2010. 12				●건축사공제조합 창립(2010.12.16) ⁽²⁵⁾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무소 가입 가능
2011. 5	개정 (2012.5.3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시험 및 관리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수련제도 신설 -자격시험 응시조건 변경(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졸업 필수, 예비시험 폐지, 기존제도 한시적 병용) -자격관리 강화(자격 등록갱신 제도 신설,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 신설) ●협회 위탁규정 확대(실무수련자 관리, 등록, 실적 관리 등) ●실무교육 의무화 ●벌칙 조정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제도 폐지 ●복수의 사무소 개설 및 소속금지 		
			●건축사법 개정안 비판 ⁽²⁶⁾ -시험 응시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부담 가중 -전문계고, 전문대 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험응시기회 박탈	
2011. 9			●대가기준 강화 요구 ⁽²⁷⁾ -법 제19조3의 대가기준에 관한 문구 수정 필요("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지급하여야 한다")	
2012. 3			●연금제도 도입 주장 ⁽²⁸⁾ -건축사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 필요	
2012. 5				●건축사등록원 설립(2012.5.31)
2012. 9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4,000개사 초과 ⁽²⁹⁾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20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지원책 요구³⁰⁾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201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위한 한국건축가연합 출범 준비³¹⁾

- 7) 이문보, 최찬환(1995),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제정과 30년의 변천사”, 『建築士』, no.31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106.
- 8) 상계서.
- 9) “건축사법 개정 시행령보류 진정”, 『동아일보』, 1965년 3월 30일.
- 10) “건축사자격시험 보이콧”, 『경향신문』, 1965년 4월 21일.
- 11) “특전은 싫다”, 『동아일보』, 1965년 4월 28일.
- 12) “건축사자격시험 근본적재검토를”, 『동아일보』, 1965년 4월 24일.
- 13) 안기태(1985),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집단거부사건”, 『建築士』, no.19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40~41.
- 14) “부실해진 건축”, 『매일경제』, 1965년 12월 5일.
- 15) “설계활동분야 넓혀야, 건축사협서 건의할 방침”, 『매일경제』, 1967년 11월 8일.
- 16) 강명구(1970), “올바른 건축을 위한 건축사법의 개정을”, 『建築士』, v.5(7),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6~7.
- 17) “측량취급 등 못해 건축설계사무소 정비지침 마련”, 『경향신문』, 1970년 11월 23일.
- 18) 대한건축사협회(1974), “건축사법개정건의서”, 『建築士』, no.71,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7~11.
- 19) 대한건축사협회(1975), “건축사법의 개선”, 『建築士』, no.76,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2.
- 20) “서민주택 최고 53%”, 『동아일보』, 1976년 7월 1일.
- 21) “경기침체로 주택신축 크게 줄어 합동건축사사무소 난항”, 『매일경제』, 1979년 4월 9일.
- 22) 최창규(1979), “건축사 보수에 허와 실”, 『建築士』, no.123,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12~15.
- 23) “건축사사무소 등록경신”, 『동아일보』, 1985년 6월 27일.
- 24) 한중언(1985), “건축사사무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建築士』, no.19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4.
- 25) 주남철(1986), “건축사학의 연구와 교육 등: 건축사와 건축사시험”, 『건축』, v.30(5), 대한건축학회, pp.41~42.
- 26) 김상균, 권문일(1993), “건축사연금의 형성과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v.21, 한국사회복지학회, pp.14~15.
- 27) 이승우(1987), “건축사 보수교육 유감”, 『建築士』, no.21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6.
- 28) 최창규(1987),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하는데...”, 『建築士』, no.225,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34~35.
- 29) 최창규(1988), “이 시대 건축사들의 독백 - 건축사 국가고시를 중심으로”, 『建築士』, no.22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33~34.
- 30) 강강철(1988), “건축사협회에 바람”, 『建築士』, no.22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32~34.

-
- 31) 대한건축사협회(1990),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建築士』, no.251,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87~91.
 - 32) 김무언(1990), “건축 3단체의 통합을 바라며”, 『建築士』, no.25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28~29.
 - 33) “내년 중 건축사법 개정키로”, 『연합뉴스』, 1992년 10월 7일.
 - 34) “건설 부동산 관련협 올 주요 사업계획(하)”, 『매일경제』, 1993년 2월 22일.
 - 35) “건축사법 개정 진통”, 『매일경제』, 1993년 4월 3일.
 - 36)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www.efc.co.kr/> 참조.
 - 37) 대한건축사협회(1994), “건축사자격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建築士』, no.29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51.
 - 38) 이호진(1994), “건설업체의 건축사업 진출 시도에 대해 - 건축사의 소명과 위치”, 『建築士』, no.300,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18.
 - 39) “건설관련 법령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 『연합뉴스』, 1994년 10월 24일.
 - 40) “시공보험 가입대상 확대”, 『매일경제』, 1994년 10월 27일.
 - 41) “건설공사 보험 의무가입 대상 대폭 확대”, 『연합뉴스』, 1994년 10월 27.
 - 42) 강기세(1994), “부실시공:설계감리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건축』, v.38(10), 대한건축학회, p.35.
 - 43) “사무소 개업 관계없이 자격증소지자 가입허용”, 『매일경제』, 1995년 2월 6일.
 - 44) “현재, 건축사법 28조 1항2호는 위헌”, 『연합뉴스』, 1995년 2월 24일.
 - 45) “공제조합 설립 추진 연금폐지 회비제도 개선도 건축사협회”, 『매일경제』, 1995년 6월 27일.
 - 46) “건축사 감리소홀심각”, 『한겨레』, 1995년 7월 4일.
 - 47) 유전희(1996), “한국건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건축』, v.40(10), 대한건축학회, pp.46~49.
 - 48) “보수기준 자체결정 변호사-건축사법등 - 공정위 경제 담합구조 대수술”, 『조선일보』, 1997년 3월 19일.
 - 49) 이관영(1997), “공정위 '건설사 설계허용'의 오류”, 『建築士』, no.33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26~28.
 - 50) “건축사 공제조합 만든다 대한건축사협회”, 『매일경제』, 1997년 8월 25일.
 - 51) “건설업체 건축시험 설계범위 놓고 티격태격”, 『매일경제』, 1997년 9월 12일.
 - 52) “건교부, 건축사법 개정안 마련”, 『연합뉴스』, 1998년 4월 30일.
 - 53) 상게서.
 - 54) 상게서.
 - 55) “변호사등 전문직 보수 수수료 자율화 23개 카르텔 내년 폐지”, 『경향신문』 1998년 7월 24일.
 - 56) “공제사업추진 건축사협회”, 『매일경제』, 1998년 9월 9일.
 - 57) 이종정(1998), “건축사와 보증제도 - 공제사업 하루가 급하다”, 『建築士』, no.354,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84~86.
 - 58)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https://www.sgic.co.kr/> 참조.
 - 59) “건축사 대가기준 마련해야”, 사설, 『건축사신문』, 2001년 4월 25일.
 - 60)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사신문』, 2001년 7월 25일.
 - 61) “건축설계 감리 적정대가 확립 및 양질 서비스 제공돼야”, 『건축사신문』, 2002년 7월 3일.
 - 62) “건축사, 공제업무 전담부서 신설”, 『건축사신문』, 1999년 4월 16일.
 - 63) 대한건축사협회(1999), “국제건축사연맹(UIA) 베이징대회 참가보고”, 『建築士』, no.363, 서

출:대한건축사협회, p.58.

- 64) 이종호(1999), “건축사들의 푸념”, 『建築士』, no.363,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70~71.
- 65)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은 시대적 요구”, 『건축사신문』, 1999년 12월 22일.
- 66) 최관영 등(1999),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분야”, 『건축』, v.43(12), 대한건축학회, pp.29~34.
- 67) “건축사법 개정과 건축사협회”, 사설, 『건축사신문』, 2000년 3월 25일.
- 68) 대한건축학회 편집부(2000),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 v.44(3), 대한건축학회, pp.10~34.
- 69) “건축사 대가기준 마련해야”, 사설, 『건축사신문』, 2001년 4월 25일.
- 70)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사신문』, 2001년 7월 25일.
- 71) “2005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강화”, 『매일경제』, 2000년 8월 8일.
- 72) “건축사법 제38조 시대착오”, 『건축사신문』, 2000년 9월 26일.
- 73) 장양순(2000), “건축사에 대한 노동부의 인식”, 『建築士』, no.370,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16~17.
- 74) “건축사 없는 건축사법”, 사설, 『건축사신문』, 2000년 11월 24일.
- 75) “‘건축교육 세계화’ 건축계 발등의 불”, 『한겨레』, 1999년 7월 15일.
- 76) “건축학 5년제 학부과정 도입”, 『매일경제』, 2001년 1월 22일.
- 77) “건축사법령 개악 추진 필사저지 결의”, 『건축사신문』, 2001년 11월 27일.
- 78) “건축사법 개악 일단 저지”, 『건축사신문』, 2001년 12월 27일.
- 79) “건축사법 전면개정은 시대적 요청”, 사설, 『건축사신문』, 2002년 11월 5일.
- 80) 한국건축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fika.or.kr/> 참조.
- 81) (사)새건축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ai2002.org/> 참조.
- 82) “폭풍우 건널 건축사 등지를”, 『한겨레』, 2002년 10월 12일.
- 83) “설계건축사에 의한 감리 보장해야 한다”, 『건축사신문』, 2004년 5월 7일.
- 84) (사)새건축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ai2002.org/> 참조.
- 85)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kaab.or.kr/> 참조.
- 86) “野의원 건축사예비시험 자격완화 추진”, 『연합뉴스』, 2005년 2월 7일.
- 87) “설계 감리비 가이드라인 유지를 - 대한건축사협회 토론회”, 『서울경제』, 2005년 3월 15일.
- 88)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pec-architect.or.kr/> 참조.
- 89) “‘건설업체 설계 겸업’ 건축업체와 갈등 재점화”, 『서울경제』, 2005년 10월 31일.
- 90) 이충기(2006), “건축사등록원(가칭) - 새로운 건축사 관리제도”, 『건축과사회』, 통권 제3호, 새건축사협의회, pp.287~289.
- 91) “세계적 건축물 짓기 위해 설계 시공 발주제도 개선돼야”, 『건축사신문』, 2006년 5월 8일.
- 92) 안우성(2006), “수련건축사의 최초 등록요건”,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53~59.
- 93) 김광배(2006), “수련건축사의 등록요건은 어떠해야 하는가”,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49~52.
- 94) 박인석(2006), “기존 건축사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 문제는 자정기능이다”,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78~80.
- 95) 김광현(2006), “건축사등록원 설립을 서두르자”, 『건축문화』, v.297, 도서출판 에이엔씨, pp.50~51.
- 96) 이충기(2006), “실무경력능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가 - 실무수련제도와 실무수련 경력 산정의 기준”,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33~35.

- 97) 이필훈(2006), “건축사등록원의 목적과 주체”,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29.
- 98) “건축사등록원 설치위한 건축사법 개정 추진”, 『건축사신문』, 2006년 8월 7일.
- 99) “건축사등록원 별도 설립 안 된다”, 『건축사신문』, 2006년 8월 7일.
- 100) 김상길(2007), “건축사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들”, 『건축과사회』, 통권 제10호, 새건축사협의회, pp.70~76.
- 101) 이충기(2007), “건축사법 개정의 현실과 개정방향”, 『건축과사회』, 통권 제10호, 새건축사협의회, pp.36~41.
- 102) “건축사 단체 통합 추진 합의”, 『건축사신문』, 2008년 1월 9일.
- 103) 김용미(2010), “건축 3단체 통합 무산 이후”, 『건축과사회』, 통권 제20호, 새건축사협의회, pp.10~12.
- 104) “대졸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갖춰야 응시자격 건축사시험 자격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2008년 6월 13일.
- 105) 김흥수(2009), “건축사와 계속 교육과 자격 등록제도”,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60~62.
- 106) 남윤옥, 이명주(2009), “한국 건축사법과 독일 건축사법 비교 분석”,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154.
- 107) 안우성(2009),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및 보증제도에 의한 건축사 업무 변화”,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106~107.
- 108) 전영철(2009),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86~88.
- 109) 정태용(2009), “건축사 자격제도 변화와 대학원 건축 교육 프로그램”,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36~41.
- 110) 김상길(2009), “건축사법의 새로운 쟁점들”,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56~57.
- 111) “대형건설사 설계 허용 원천 차단돼야”, 『건축사신문』, 2009년 4월 8일.
- 112) “건설사 설계허용, 건축사 생존대책부터 세워라”, 사설, 『건축사신문』, 2009년 5월 11일.
- 113) “건축 3단체” 통합의 변수”, 『건축사신문』, 2009년 6월 8일.
- 114)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 사용 폐지 추진”, 『건축사신문』, 2009년 8월 10일.
- 115) “건설업체 건축설계범위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2009년 7월 14일.
- 116) 건설감리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www.cmfc.co.kr/> 참조.
- 117) “‘건축사사무소’ 명칭 계속 의무사용키로”, 『파이낸셜뉴스』 2009년 8월 25일.
- 118) “건축사 죽이기 개악입법, 두고 볼 건가”, 사설, 『건축사신문』, 2009년 9월 9일.
- 119) “건축사 업역 도대체 어디까지 빼앗겨야”, 『건축사신문』, 2009년 9월 9일.
- 120) “건설사 설계겸업 현실로, 건축사 쓰나미 경보”, 『건축사신문』, 2009년 9월 9일.
- 121) 박인석(2009), “건축사의 법적 지위”, 『建築士』, no.486,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15.
- 122) “단체통합 및 정관개정안 부결 충격”, 『건축사신문』, 2009년 11월 11일.
- 123) “건설사 설계허용 반기든 대한건축사협회 한명수 회장”,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4일.
- 124) 손원태(2010), “건축사공제조합의 출범에 즈음하여”, 『建築士』, no.49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10.
- 12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열려”, 『건축사신문』, 2010년 12월 16일.
- 126) “개정 건축사법의 문제점”, 『건설경제』, 2011년 5월 24일. (22일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개정일인 30일보다 앞서 기사가 게재됨)
- 127)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비 깎아먹기 중단하라”, 사설, 『건축사신문』, 2011년 9월 16일.

2. 여건 변화를 반영한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 개정 과정에서 건축사법의 목적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1962.12.16 시행)’에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2012.5.31 시행)’으로 변경되어 건축사의 업무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문화발전에의 기여를 명시하는 한편, 건축사자격요건이 국제 수준에 맞춰 강화되는 등 건축사법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음
- 그러나 현행 건축사법은 국제 시장 개방, 다수의 건축사들이 고용된 대형건축사사무소의 증가와 시장 독점 등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는 결국 건축사들의 업무 여건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궁극적으로 적절한 건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축사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건축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8) 김청권(2012), “건축사 연금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建築士』, no.515,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80~82.

129) 건축사 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www.kira-ic.or.kr/> 참조.

130) 강성익(2012), “대한건축사협회, 새정부에 바라는 건축 어젠더”, 『건축』, v.56(12), 대한건축학회, pp.16~17.

131) “건축업계 다시 뭉친다 ‘한국건축가연합’ 출범 시동”, 『아시아경제』, 2013년 1월 24일.

제3장 건축사 제도 개선 방향 검토

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 방향
2.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4.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5. 건축사 징계제도 검토를 위한 개선 방향

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 방향

1) 검토 배경

□ 건축법인 제도 필요성 제기

- 다양한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협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필요성 제기
 - 건축법인 제도를 통해 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연합하여 단일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구성원 건축사들의 실적을 공유하고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건축시장에 대한 진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건축법인 도입은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규모의 사무소들이 균형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

[표 3-1] 회사규모별 건축설계 산업 현황(2011년)

종사자 규모	사업체		매출	
	개수(개)	비율(%)	금액(백만 원)	비율(%)
1~4인	5,918	73.1	892,479	18.13
5~9인	1,339	16.5	559,256	11.4
10~19인	491	6.1	682,173	13.9
20~49인	228	2.8	594,832	12.1
50인 이상	117	1.4	2,192,782	44.6
합계	8,093		4,921,523	

※ 자료출처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현행 건축사 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동업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에 대한 과세 및 개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중으로 이루어짐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업기업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실적이 사무소 개설자에게 귀속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실적부여가 불가능
 - 전문 분야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및 신진 건축사의 시장 진입에 애로 사항 존재

□ 건축사사무소 법인관련 제도 경과

- 1963년 12월 최초 제정된 건축사법에는 법인격의 건축사사무소 설립을 뒷받침하는 법조문이 부재한 상태였음
 - 1966년 일부 건축사들이 개인명의로만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설계사의 발전과 대외공신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설계사무소를 기업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¹³²⁾
- 1977년 12월 법인격의 합동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짐
 - 법인 합동사무소는 건축사가 2명 이상이고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132) “부실해진 건축”, 「매일경제」, 1965년 12월 5일.

과반수가 건축사이어야 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설계는 단독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영세한 설계사무소들의 난립 방지와 통합 및 대형화를 통한 자질향상 유도¹³³⁾

- 1980년 1월 건축사보를 고용하여 공동주택 이외의 설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단독/합동/단독종합/합동종합 네 가지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설립이 가능하게 됨
-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복잡한 건축사사무소의 형태구분과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한 등의 규제를 해소하여 한 가지 형태의 건축사사무소로 일원화
 - 설계에 대한 연대책임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설계대상 감소 등의 문제로 합동사무소 설립이 부진하여¹³⁴⁾ 1982년 7월 합동사무소의 설계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나, 1984년 12월에 이르러 합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단독/종합 두 가지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제도로 이원화함¹³⁵⁾
 - 이마저도 1995년 1월 국내시장개방과 병행한 건축사사무소 자율화조치로 인해 형태구분, 등록기준, 업무범위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¹³⁶⁾, 법인에 관한 규정은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남게 됨
- 1995년 개정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법인 건축사사무소 관련 법 문제
 - 건축사가 아닌 자도 건축사와 공동으로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2009년 6월의 시행령 개정 외에 법인관련 법 개정 없음
 - 최근 건축사사무소와 소속 건축사의 관계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¹³⁷⁾¹³⁸⁾

133) “측량취급등 못해 건축설계사무소 정비지침 마련”, 『경향신문』, 1970년 11월 23일.

134) “경기침체로 주택건축 크게 줄어 합동건축사사무소 난항”, 『매일경제』, 1979년 4월 9일.

135) “건축사사무소 등록경신”, 『동아일보』, 1985년 6월 27일.

136) “국내 설계시장 내년 개방”, 『연합뉴스』, 1995년 5월 12일.

137) 김상길(2007), “건축사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들”, 『건축과사회』, 통권 제10호, 새건축사협

[표 3-2] 건축사사무소 관련 법 변화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1960년대	법 제정 (1963.12.16시행)	●건축사사무소 법인 설립조항 부재	●법인 건축사사무소 설립 허용 요구	
1970년대	법 개정 (1978.7.1시행)	●합동건축사사무소(법인) 규정 신설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업무범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자질향상 위해 영세 건축사사무소의 통합 증용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를 통해 보수요율 덩핑현상 해소 기대 ●합동건축사사무소 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에 대한 연대책임, 설계대상 구분으로 인한 설계대상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난립된 건축사사무소 통합부진 및 설립기피 (합동건축사사무소 설계대상: 1만5천㎡이상 특수건축물, 20층 또는 3만㎡이상 일반건축물과 단독주택등)
1980년대	법 개정 (1980.4.1시행)	●중합건축사사무소제 도입 (공동주택등을 제외한 건축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발전을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만 있으면 개업건축사 아니어도 중합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하도록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유도 필요 -대기업의 설계업무 허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단독/합동/단독중합/합동중합 네 가지 건축사사무소를 단독/중합으로 이원화하여 등록경신
	법 개정 (1982.7.1시행)	●합동건축사사무소 업무범위 확대 (20층 또는 3만㎡이상에서 11층 또는 1만㎡이상으로 설계업무범위 확대)		
	법 개정 (1985.1.1시행)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 폐지 ●중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제한 폐지		
1990년대	법 개정 (1995.7.1시행)	●단독 및 중합 건축사사무소 제도 폐지 및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유도와 관련한 논란 ●건설회사의 설계업무 진출시도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WTO , GATS 가입(1995.1.1) ●건축사사무소 자율화 조치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구분, 등록기준, 업무범위 폐지
2000년대	시행령 개정 (2009.7.1시행)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와 건축사의 공동법인 설립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내 건축사의 독립적인 법적지위 요청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바람직한 	

의회, pp.72~73.
 138) 김상길(2009), “건축사법의 새로운 쟁점들”,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56~57.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운영 형태와 제도 개선 제언 -법인제 구성 건축사와 소속 건축사의 역할 규정 -개별 소속 건축사의 법적 지위 확보	
2010 년대	법 개정 (2012.5.31시행)	●복수의 사무소 개설 및 소속금지		

2)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사사무소 현황

- 1인 혹은 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전체 사무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사실상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 영세 사무소의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법을 수차례 개정하였으나 주효한 성과가 없었으며, 현행 건축사법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합동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를 유도하려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결국 건축사사무소의 구분을 폐지한 이후 현재까지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

[표 3-3] 규모별 건축사회 등록 사무소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인사무소	1인	사무소	5,070	5,176	5,336	5,482	5,862	6,071
		회원	5,070	5,176	5,336	5,482	5,862	6,071
	2인	사무소	124	108	98	93	90	87
		회원	248	216	196	186	180	174
	3인 이상	사무소	12	10	8	8	8	7
		회원	36	30	24	24	24	21
	소계	사무소	5,206	5,294	5,442	5,583	5,960	6,165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사무소	1인	회원	5,354	5,422	5,556	5,692	6,066	6,266
		사무소	1,650	1,641	1,690	1,647	1,712	1,752
		회원	1,650	1,641	1,690	1,647	1,712	1,752
	2인	사무소	270	256	243	230	226	233
		회원	540	512	486	460	452	466
	3인	사무소	64	57	61	52	57	60
		회원	192	171	183	156	171	180
	4인	사무소	20	24	26	26	27	24
		회원	80	96	104	104	108	96
	5인 이상	사무소	32	28	25	21	19	15
		회원	236	188	163	139	124	101
	소계	사무소	2,036	2,006	2,045	1,976	2,041	2,084
		회원	2,698	2,608	2,626	2,506	2,567	2,595
합계		사무소	7,242	7,300	7,487	7,559	8,001	8,249
		회원	8,052	8,030	8,182	8,198	8,633	8,861

※ 자료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 사무소 및 회원수는 전입미처리자가 추가된 통계임

-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주식회사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사무소가 '13년 기준 2,084개소가 존재
 - 타 전문직 법인형태에서 물적기반 회사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과 배치되는 상황이며, 해외 설계사무소에서 취하고 있는 파트너십 기반의 회사형태와도 이질적인 형태임
 - 1977년 12월 법인격의 합동건축사사무소를 설립, 1980년도 종합 건축사제도의 도입, 1984년 이원화제도 운영, 1995년 단일 사무소 형태의 도입 등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게 됨
- 현행 「상법」 상의 주식회사 형태는 회사설립 및 운영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 따라서 2013년도에 「상법」을 개정하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유한책임회사는 인적자산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동기업형

태로서 구성원간 사적자치 보장, 이익배당, 의결권분배, 퇴사, 지분양도 등에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다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는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상법」의 규제를 따른다면 가장 규제적 요소가 강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실적관리는 신고 자체가 선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법인 형태의 건축사사무소는 공동대표제도를 이용하여 실적관리를 하고 있음
- 상당부분 실명화하고 있다는 이해도 가능하지만, 타 전문직 업무 분야와 비교할 때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업무 책임소재를 특정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 자격제도 운영 현황

-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와 건축사사무소 개설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3년 12월 16일 제정. 제2장에서 건축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제5장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신고와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 현행 「건축사법」 내에서는 사무소 개설신고 주체로서 법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인인 건축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이하 생략)

- 다만, 시행령에서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를 건축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아닌 자도 건축사와 공동으로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상황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3) 유사사례 분석

① 전문직 법인 사례

- 전문직의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공유함
 - 자기책임 하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위임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전문교육과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단순한 영업동기 이상의 직업윤리를 요한다는 점, 직렬별 특별법이 존재¹³⁹⁾
 - 전문직 법인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을 의미¹⁴⁰⁾

139) 박상근(2002), “전문직을 위한 회사형태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555호, 법조협회, pp.237~238.

140) 이훈중(2005),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p.301.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그 자격과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 존재
 - 1949년 변호사법 제정(1949.11.7)을 시작으로 사법서사법(1954.4.3, 이후 법무사법으로 명칭 변경), 세무사법(1961.9.9), 변리사법(1961.12.23), 공인회계사법(1966.9.1) 등이 제정
 - 자격에 관한 특별법에는 법무법인, 세무법인, 관세사법인 등 직종별로 고유한 회사 형태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표 5-1]. 이들 조항은 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관세사법), 고유의 회사 형태 규정 필요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신설되는 경우가 많음
- 전문직 법인은 법인 형태중 물적기반의 주식회사는 배제하고 있고, 인적기반의 회사 형태만을 인정하고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합명, 유한, 조합 형태의 법인을 규정하고, 기타 전문직의 경우 유한 또는 합명 등의 단일형태만을 법률에서 규정
 - 전문직 법인의 경우, 변호사와 같이 공익성이 중요시 되거나, 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독립된 중립적 위치가 부여될 필요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를 목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형태로 이해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표 3-4] 관련 법인 및 특별법 제정 시기

전문직 특별법	법 제정일	회사형태	법인	법인 조항 신설일
변호사법	1949.11.7.	합명	법무법인	1982.12.31.
		유한	법무법인(유한)	2005.7.28.

전문직 특별법	법 제정일	회사형태	법인	법인 조항 신설일
		조합	법무조합	
공인회계사법	1966.9.1.	유한	회계법인	1968.12.31.
세무사법	1961.9.9.		세무법인	1961.9.9.
관세사법	1996.7.1.		관세사법인	1996.7.1.
법무사법	1954.4.3.	합명	법무사합동법인	1997.1.1.
변리사법	1961.12.23.		변리사법인	2000.7.1.
공인노무사법	1985.7.1.		노무법인	1990.4.7.

- 전문직 법인의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 자격증 소지자 아닌 자가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 34조4항, 5항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 업무를 통한 보수나 수익에 대한 분배를 금지하고 있음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회계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만이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인회계사법 제26조(이사 등)

-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30.] [시행일 : 2016.7.2]

□ 전문직 법인 구성관련 조문 비교

[표 3-5] 전문직 법인 구성관련 조문 비교

구분		회사형태	구성원전문직 (사원)	이사	소속전문직 여부	최소회사규모
변호 사법	법무법인	합명회사	3명 이상	-	둘 수 있음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유한회사	7명 이상	3명 이상 (구성원 중)		
	법무조합	조합(민법)	7명 이상	-		
공인 회계 사법	회계법인	유한회사	3명 이상	3명 이상 (사원 중)	둘 수 있음 (소속공인회계사)	1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세무 사법	세무법인	유한회사	3명 이상	3명 이상 (사원 중)	둘 수 있음 (소속세무사)	5명 이상의 세무사
관세 사법	관세법인	유한회사	3명 이상	3명 이상 (사원 중)	둘 수 있음 (소속관세사)	5명 이상의 관세사
변리 사법	특허법인	합명회사	5명 이상	-	둘 수 있음 (소속변리사)	-
	특허법인(유한)	유한회사	5명 이상	3명 이상 (구성원 중)		
공인 노무 사법	노무법인	합명회사	2명 이상	-	둘 수 있음 (소속공인노무사)	-
법무 사법	법무사합동법인	합명회사	5명 이상	-	둘 수 있음 (소속법무사)	-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제도

- 도입 과정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11월 7일 변호사법이 제정됨
 -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상법의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 제도가 신설됨
 - 2005년 1월 27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유한법무법인과 기본적으로 조합의 형태이나 구성원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
- 법률사무소 현황
 - 전체 630개의 법인 법률사무소 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소가 7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표 3-6] 변호사 수에 따른 법률사무소 현황(2009년 말 기준)

변호사 수	2인 이하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법인 수(개)	71 (11.3)	46 (7.3)	33 (5.2)	480 (76.2)	630

※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 변호사백서 2010」, 재정리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회칙상)공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 수치

※ ()안은 합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

[표 3-7] 변호사 수에 따른 법률사무소 세부 현황(2009년 말 기준)

변호사 수(인)	1~5	6~10	11~20	21~30	31~40	41~50	51~100	101~200	201~300	301~	합계
법인 수(개)	350 (55.6)	209 (33.1)	44 (7.0)	6 (1.0)	4 (0.6)	3 (0.5)	8 (1.3)	3 (0.5)	2 (0.3)	1 (0.2)	630

※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 변호사백서 2010」, 재정리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회칙상)공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 수치

※ ()안은 합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

[표 3-8] 우리나라 대표 법률사무소 인원 구성(2013년 6월 기준)

구분	형태	구성원(인)	소속변호사(인)	합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143	360	503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109	190	299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24	273	297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84	165	249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79	148	227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한)	54	144	198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42	96	138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41	56	97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38	58	96
법무법인 총정	법무법인	40	55	95

※ 출처 : “ ‘김앤장’ , 변호사 500명 넘었다 ” , 「법률신문」 , 2013년 6월 18일, 재정리

② 해외사례

□ 일본

- 일본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적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다양한 회사 형태가 존재
 - 1급건축사, 2급건축사, 목조건축사를 고용하여 회사 운영 가능
 - 실적관리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에 속한 건축사들의 사업 연도별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일본 건축사법

(등록)

제23조 ① 1급건축사 , 2급건축사 또는 목조건축사 또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설계, 공사감리, 건축공사계약에 관한 사무, 건축공사의 지도감독, 건축물에 관한 조사 또는 감정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대리(목조건축사 또는 목조건축사를 사용하는 자(목조건축사 외에 1급건축사 또는 2급건축사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목조 건축물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 이하 “설계 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1급건축사사무소, 2급건축사사무소 또는 목조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그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도도부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기산 해 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등록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설계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사사무소에 갱신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

제23조의2 ①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그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1급건축사사무소, 2급건축사사무소 또는 목조건축사사무소의 구별
3. 등록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임원(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성명
4. 제24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관리건축사의 이름과 그 사람의 1급건축사, 2급건축사 또는 목조건축사의 구별
5. 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의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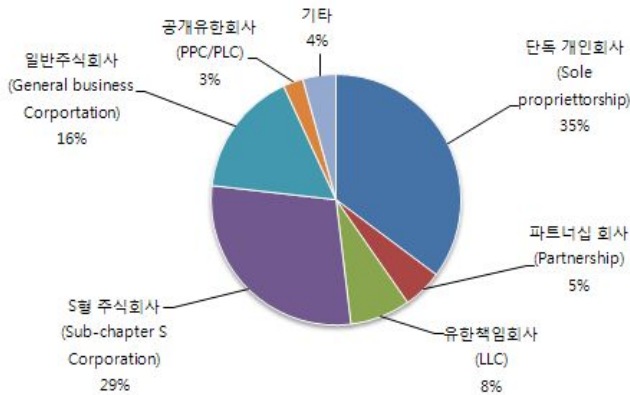
(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

제23조의6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세 달 이내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따른 등록을 한 도도부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1. 당해 사업 연도의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실적 개요
2.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의 이름
3. 제2호의 건축사의 당해 사업 연도의 업무 실적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것에 한한다)
4. 제3호로 내거는 것의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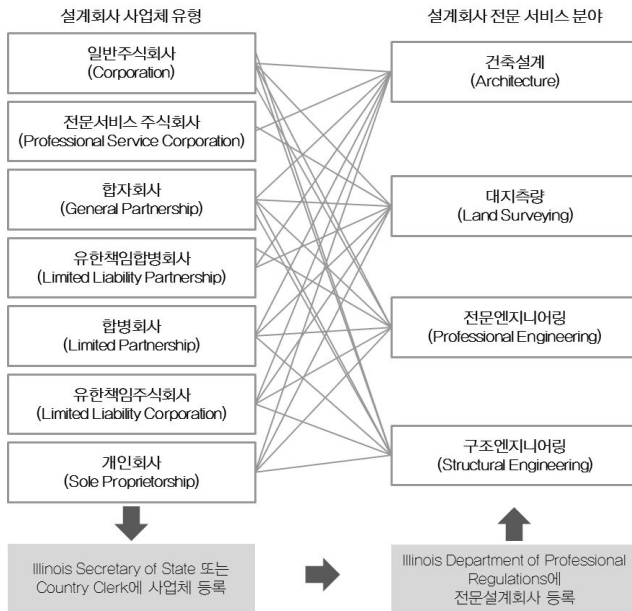
□ 미국

- 미국의 경우 주마다 건축사법인 설립요건에 차이가 존재
 - 각 주정부의 법과 제도에 따라 법인 설립



[그림 3-1] 미국 설계회사의 유형별 구성('03 AIA Survey)

출처 : 김예상, 한미파슨스(2005), p173.



[그림 3-2] 일리노이주 전문설계회사의 사업체 유형 및 서비스 분야
출처 : 김예상, 한미파슨스(2005), p173.

[표 3-9] 설계회사의 서비스 유형별 등록 요건 - 일리노이주

서비스 분야	회사 구성원과 관련된 등록 요건
건축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회사의 유형별로 아래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회사의 경우 이사진(board of director)의 2/3 이상 -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일 경우 파트너의 2/3 이상 -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구성원의 2/3이상 • 적어도 1인 이상의 일리노이주 건축사 면허 소지자를 설계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대리인(managing agent)으로 선임할 것, 이때 경영대리인은 상근직의 이사, 파트너, 또는 직원이어야 함
대지 측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1인 이상의 일리노이주 측량사 면허 소지자를 설계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대리인으로 선임할 것, 이때 경영대리인은 상근직의 이사, 파트너, 또는 직원이어야 함
전문 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1인 이상의 일리노이주 기술사 면허 소지자를 전문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대리인으로 선임할 것, 이때 경영대리인은 상근직의 이사, 파트너, 또는 직원이어야 함
구조 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1인 이상의 일리노이주 구조기술사 면허 소지자를 구조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대리인으로 선임할 것, 이때 경영대리인은 상근직의 이사, 파트너, 직원이어야 함

※출처 : 김예상, 한미파슨스(2005), 「미국 설계 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서울:보문당, p.174.

-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 건축사사무소가 존재
 - private company, public company, employee owned corporation, private employee owned corporation, partnership, incorporated compan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

[표 3-10] 미국 20대 설계업체의 회사 형태 (단위: 백만 달러)

2013 순위	2012 순위	회사명	미국 본사 위치	회사 유형	회사형태
1	1	Gensler	San Francisco, Calif.	A	Private Company
2	2	AECOM Technology Corp.	Los Angeles, Calif.	EA	Public Company
3	4	CH2M HILL/IDC Architects	Englewood, Colo.	EAC	Employee Owned Corporation
4	6	Jacobs	Pasadena, Calif.	AEC	Public Company
5	3	Perkins+Will	Chicago, Ill.	A	Private Company
6	5	HDR Architecture Inc.	Omaha, Neb.	EA	Private Employee Owned Corporation
7	8	URS Corp.	San Francisco, Calif.	EAC	Public Company
8	7	HOK	St. Louis, Mo.	AE	Private Company
9	9	HKS Inc.	Dallas, Texas	AE	Private Company
10	10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New York, N.Y.	AE	Partnership
11	12	NBBJ	Seattle, Wash.	A	Private Company
12	13	RTKL	Baltimore, Md.	EA	Incorporated company
13	14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PC	New York, N.Y.	A	Private Company
14	16	Perkins Eastman	New York, N.Y.	A	Private Company
15	11	Cannon Design	Grand Island, N.Y.	AE	Private Company
16	18	Callison	Seattle, Wash.	A	Private Company
17	15	Leo A Daly	Omaha, Neb.	AE	Private Company
18	21	Bechtel	San Francisco, Calif.	EC	Private Company
19	17	Stantec Inc.	Irvine, Calif.	EAL	Public Company
20	19	ZGF Architects LLP	Portland, Ore.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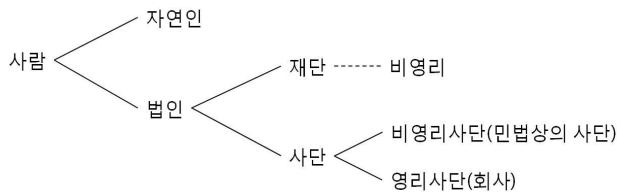
※출처 : Architectural Record(2013), *Top 300 Architecture Firms*, 재정리.
 (<http://archrecord.construction.com/practice/top250/2013/top300-architecture-firms-1.asp>)

※A = Architect, AE = Architect - Engineer, P = Architect Planner, EAL = Engineer Architect Landscape, AEC = Architect - Engineer - Contractor

③ 회사의 개념과 종류

□ 회사의 개념

- 회사의 정의와 위상
 - 「상법」 제169조에 따르면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
 -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뜻하는 법인은 재단과 사단으로 나뉘는데 사단 중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곧 회사에 해당



[그림 3-3] 회사의 인격적 위상

출처 : 이철송(2013), p.40.

- 회사의 성격
 - 인적회사 : “개인상인의 조합적 결합으로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구성원만으로 일워진 기업형태”를 의미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이에 해당함¹⁴¹⁾
 - 물적회사 : “각 사원이 단순히 출자를 매개로 하여 결합한 기업의 법적 형태”를 의미하며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함¹⁴²⁾

141) 이철송(2013), 「회사법강의」, 제21판, 서울:박영사, p.81.

142) 상계서.

143) 2011년 4월 14일에 있었던 상법 개정(2012년 4월 15일 시행)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사원 총수 50인 초과 불가, 사원총회 결의 없는 지분양도 불가, 최소 자본총액 확보 등의 규정이 폐지되었다.

[표 3-11] 회사 형태간 비교

	인적회사			물적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¹⁴³⁾	주식회사
사업목적	이윤극대화				
설립방식	신고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 유한책임	유한책임		
소유자와 경영자의 관계	일치	일치 (유한책임사원은 경영 불가)	일치 또는 분리 (제3자 경영가능)	분리 (제3자 경영)	
운영방식	1인 1표			1좌 1표	1주 1표
현물재산 외 신용·노무출자	가능	가능 (유한책임사원은 불가)	불가		
내부관계 자치 (기관구성, 이익분배)	인정			불인정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예외)	
지분양도	제한			자유	
입사·퇴사 제도	인정			없음	
동업·기업과세특례 대상	해당		해당하지 않음 (이중과세)		
예시	법무법인 율촌	미래에셋 PEF	Dream Works Animation LLC,	세무법인 하나	삼성전자(주)

※ 출처 : 「상법」, 박세화(2007), “유한책임회사제도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법학연구」, v.48(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수현(2012),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v.35(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재정리

[표 3-12] 회사형태별 법인 수 변화

연도	합계(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1993	101,173	499 (0.5)	3,434 (3.4)	-	3,863 (3.8)	93,377 (92.3)
1994	113,644	738 (0.6)	3,807 (3.3)	-	4,206 (3.7)	104,893 (92.3)
1995	129,748	793 (0.6)	4,428 (3.4)	-	5,031 (3.9)	119,496 (92.1)
1996	147,251	939 (0.6)	4,797 (3.3)	-	5,806 (3.9)	135,709 (92.2)
1997	165,837	963 (0.6)	5,030 (3.0)	-	6,242 (3.8)	153,602 (92.6)

연도	합계(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1998	168,070	996 (0.6)	4,956 (2.9)	—	6,656 (4.0)	155,462 (92.5)
1999	192,051	1,025 (0.5)	5,114 (2.7)	—	6,893 (3.6)	179,019 (93.2)
2000	227,973	1,020 (0.4)	5,008 (2.2)	—	7,697 (3.4)	214,248 (94.0)
2001	272,382	850 (0.3)	4,115 (1.5)	—	8,749 (3.2)	258,668 (95.0)
2002	303,715	874 (0.3)	4,027 (1.3)	—	9,428 (3.1)	289,386 (95.3)
2003	315,612	826 (0.3)	3,897 (1.2)	—	10,029 (3.2)	300,860 (95.3)
2004	326,610	781 (0.2)	3,797 (1.2)	—	10,827 (3.3)	311,205 (95.3)
2005	345,749	741 (0.2)	3,806 (1.1)	—	12,091 (3.5)	329,111 (95.2)
2006	335,852	731 (0.2)	3,715 (1.1)	—	12,244 (3.6)	319,162 (95.0)
2007	377,430	805 (0.2)	3,758 (1.0)	—	13,514 (3.6)	359,353 (95.2)
2008	398,624	829 (0.2)	3,774 (0.9)	—	14,613 (3.7)	379,408 (95.2)
2009	421,938	853 (0.2)	3,834 (0.9)	—	16,225 (3.8)	401,026 (95.0)
2010	447,330	851 (0.2)	3,797 (0.8)	—	17,272 (3.9)	425,410 (95.1)
2011	478,063	838 (0.2)	3,851 (0.8)	—	18,854 (3.9)	454,520 (95.1)
2012	460,614	814 (0.2)	3,636 (0.8)	—	18,818 (4.1)	437,346 (94.9)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재정리(유한책임회사는 제도가 2012년에 도입된 관계로 통계상 집계되지 않음)

※()안의 수치는 합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유한책임회사

- 정의
 - － 합명(인적)회사 요소와 주식(물적)회사 요소를 혼합한 회사형태
 - －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경영참여가 인정되며 출자에 따른 손익분배를 정함에 있어 정관자치가 인정되고, 대외적으로는 전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법인을 말함¹⁴⁴⁾

- 도입배경¹⁴⁵⁾

- 기존의 상법에 따른 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구분되고 있었는데 인적회사는 무한책임(합명회사의 경우 전사원의 무한책임,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무한책임)과 이중과세의 문제로 기업가들이 선호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소규모의 기업에서조차 주식회사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었으나¹⁴⁶⁾, 전형적인 물적회사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크기가 중시되는 회사법제로서 사업구조, 기업조직, 기업지배의 측면에서 사원간의 자치가 중요하고 인적능력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이 필요한 지식기반형 기업에는 적절하지 못함
- 또한 1993년부터 20년간에 걸친 회사종류별 비율변화를 살펴보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전체 회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난 반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결국 인적기업이면서도 유한책임을 기조로 하는 기업형태의 법제화 필요성이 있어 미국의 통일유한책임회사법(미국판 LLC법)과 일본의 합동회사법(일본판 LLC법)을 기초로 하여 2011년 4월 14일 상법 개정을 통해 광범위한 정관자치가 허용되는 새로운 기업유형인 유한책임회사 제도(2012년 4월 15일 시행)를 도입하게 됨¹⁴⁷⁾

144) 박수현(2012),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v.35(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41.

145) 송인방(2012), “개정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v.26(3), 한국기업법학회, p.145.

14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가동 법인수에서 전체 440,514개의 법인 중 주식회사가 401,026개, 유한회사가 16,225개, 합자회사가 3,834개, 합명회사가 853개, 비영리 17,003개, 외국법인 1,573개의 순으로 주식회사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법인 중 중소기업법인이 334,005개이고, 자본금규모에서 10억 이하인 법인이 419,420개 중 386,835개였다”(박수현(2012),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v.35(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26.).

147) 국회 상법개정안 의안 원문(의안번호 11092) pp.2~3.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형태 또는 회사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 설립요건
 - 사원의 수 : 1인 이상이면 성립 가능하며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사원의 출자 : 현물 외에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설립등기 전까지 금전 및 그 밖의 출자 전부 이행해야 함 (주식회사처럼 사원들이 유한책임만 지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¹⁴⁸⁾, 허나 유한책임회사가 인제중심형 기업형태로서 도입된 이유로 노무출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존재¹⁴⁹⁾)
 - 등기 :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회사 성립
- 책임
 - 사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짐
- 업무집행(경영)
 - 사원이나 제3자에 의한 업무집행이 모두 가능, 즉 회사 소유자와 경영인의 일치 또는 불일치가 모두 가능함
- 내부관계 자치
 -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또한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관구성이나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관을 통한 내부관계 자치로 정할 수 있음
- 지분 양도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한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함으로써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8) 안경봉(2010),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과 세법상 대응방안”, 『조세학술논집』, v.26(1), 한국국제조세학회, p.451.

149) 박세화(2002), “미국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v.8(2), 연세법학회, p.4, 곽수현(2012),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v.35(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7.에서 재인용.

- 입사·퇴사 제도
 - 정관 등을 통한 사원의 입사 및 퇴사를 인정하고 있음¹⁵⁰⁾
 - 정관 변경을 통해 새로운 사원의 가입 가능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여부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함
 -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로 볼 것인지 물적회사로 볼 것인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있음¹⁵¹⁾

□ 협동조합

- 정의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법인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도입배경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계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을 통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함

150) 유한책임회사에서 퇴사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사원들이 소수이므로 사원의 개성이 회사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원을 배제(제명 등)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櫻井 隆(2008), “合同會社の法的性質”, 『經營論叢』, v.18(1), 文京學院大學, p.121, 송인방(2012), “개정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v.26(3), 한국기업법학회, p.163.에서 재인용).

151) 안경봉(2010),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과 세법상 대응방안”, 『조세학술논집』, v.26(1), 한국국제조세학회, pp.476~477.

- 설립요건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조합원의 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 출자 및 책임
 - 정관에 따라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현물 출자 가능)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그 한도로 함
- 선거권과 의결권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만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가능
- 기관 구성
 - 총회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
 - 이사회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
 - 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
- 가입·탈퇴 제도
 -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름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여부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함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유한책임 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성격상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법인

[표 3-13] 협동조합과 기타 법인간 비교

구분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사단법인	협동조합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유한책임 회사	유한 회사 ¹⁵²⁾	주식 회사
		일반	사회적					
사업목적	공익	조합원 실익증진		이윤극대화				
영리성	비영리	영리	비영리	영리				
운영방식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1좌 1표	1주 1표
설립방식	인가	신고	인가	신고				
책임범위	-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 유한책임	유한책임		
규모	주로 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중소규모				대규모
성격	인적 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물적결합
사업 예시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 협동조합	법무법인	사모 투자회사	(美)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중소기업, 세무법인	대기업 집단

④ 법률 개정(안)

- 건축사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제안 있었음

* 2010년 8월 27일, 박기춘의원은 건축사법인 신설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발의안 의안번호 제1809193)

152) 2011년 4월 14일에 있었던 상법 개정(2012년 4월 15일 시행)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사원 총수 50인 초과 불가, 사원총회 결의 없는 지분양도 불가, 최소 자본총액 확보 등의 규정이 폐지되었다.

□ 건축사법 개정안 개요

- 추진배경
 - 건축사 업무의 조직화와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변화하는 건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사 및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공공부문 역할을 건축사의 책임 하에 일부 대행하는 새로운 회사 형태로서 건축사법인에 대한 도입 논의
- 주요내용
 - 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인력 양성, 관련 기술 집적, 건축행정의 공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건축사법인 신설 요구
 - 신고기준, 업무법인 등 법인 구성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하고자 함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건축사법인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건축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인이 아닌 자는 건축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건축사법인의 구성원은 건축사법인 이외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익성을 위한 업무를 건축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법인의 구성, 인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타 전문직의 경우 개인사무소 형태에서 대형화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인형태가 등장
 - 별도의 회사형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직 법인은 공익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를 목적으로 특정 법인형태를 법률에서 규정

- 전문직 법인에 관한 규정 변화를 살펴보면 개인 사무소 형태에서 책임한계 설정의 문제로 인해 합명 → 합자 → 유한 등의 형태로 변화되어 오고 있음
-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며, 해외진출 등을 위해 대형화 및 자본의 집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관점도 가능

[표 3-14] 전문직 사무소 제도의 도입 및 폐지 연혁

시기	변호사법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공증인법 포함)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개인 사무 소	법인사무소				개인 사무 소	법인사무소			개인 사무 소	법인사무소	
		합동 법률 사무 소	법무 법인 (무한)	법무 법인 (유한)	법무 조합		합동 회계 사무 소	회계 법인 (무한)	회계 법인 (유한)		합동 사무 소	세무 법인 (유한)
1949.11	도입											
1961.9										도입		
1966.7						도입						
1968.12								도입				
1970.12		도입										
1978.12											도입	
1982.12			도입									
1989.12							도입					
1997.1							폐지	폐지	도입			
2002.12											폐지	도입
2005.1		폐지		도입	도입							
현재												

- 인적기반의 건축법인 신설로 기존 주식회사 법인 형태에 비해 회사운영, 영업, 금융거래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을 찾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금융 분야 주식회사의 경우 회계감사, 이사, 주주 등의 체계가 있어 금융권에서 보다 선호되며, 조합 또는 합자회사 보다는 주식회사가 영업측면에서 소비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

- 해외의 경우 파트너십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전통이 있는 반면 국내는 이러한 경험이 부재
- 인적기반의 건축법인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부분은 동업기업 지정을 통한 파트너십 과세 제도 고려 가능
 - 조세측면에서 동업기업특례는 해당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선택적인 부분이며, 법인 설립근거 마련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
 - 조세측면은 회사의 특성상 유보금 비율, 소득구간, 영업환경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져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
 - 법인세율이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환경에서 파트너십 과세 적용은 커다란 유인책이 될 수는 없음

[표 3-15]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비교

구분	기준(과세표준)	세율
소득세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법인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25%
	기타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14%

- 1984년 12월 건축사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에 책임건축사제를 도입
 - 원래는 종합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

어 있었으나 책임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이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됨

- 책임건축사 지정은 의무규정이 아님
- 1995년 1월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가 폐지되면서 책임건축사 규정도 함께 삭제됨

[표 3-16] 책임건축사 관련 법 변화

시기	관련 법 변화		제·개정 이유
	제·개정 내용	내용	
[시행 1985.1.1] [법률 제3767호, 1984.12.31,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건축사 제도 도입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업무담당자 개념 설정 -책임건축사의 연대 책임 명시 -건축사개인에 대한 징계 도입 	<p>제23조 (등록) ① 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건축사사무소는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한다.</p> <p>③단독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p> <p>④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수탁한 업무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인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⑥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⑦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84.12.31]</p> <p>제23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등 <개정 1980.1.4>) ① 삭제 <1980.1.4></p> <p>② 삭제 <1980.1.4></p> <p>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에게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2.4.3, 1984.12.31></p> <p>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하는 경우 동일한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한 조사업무를 대행할 자와 공사감리를 하고 당해 건축물의 준공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자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12.31></p> <p>⑤종합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건축사를 정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책임건축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0.1.4, 1984.12.31></p> <p>[본조신설 1977.12.31]</p>	<p>법령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의 사유를 추가하고,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제도를 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축사개인에 대한 업무정지제도로 전환하려는 것</p> <p>- 종전의 건축사사무소폐쇄처분제도는 법령위반행위를 한 건축사에 대한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적었기 때문에 건축사개인에 대한 업무정지제도로 전환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나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거치도록 함</p>

시기	관련 법 변화		제개정 이유
	제개정 내용	내용	
		<p>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개정 1984.12.31>) ① 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건축사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84.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 다만, 2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조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4의2.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6.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때 7. 제30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9.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10.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의한 때 <p>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p> <p>[전문개정 1977.12.31]</p>	
[시행1995.7.1] [법률 제4918호, 1995.1.5, 일부개정]	<p>●책임건축사 제도 폐지</p> <p>- 종합건축사사무소 규정 삭제</p>	<p>제23조 (등록) ① 건축사가 건축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p> <p>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건축사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자율적 경쟁을 통한 기술향상을 도모하도록 건축사사무소등록제도를 개선</p> <p>- 건축사사무소의 종류를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하여 등록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p>

시기	관련 법 변화		제개정 이유
	제개정 내용	내용	
		⑤건축사무소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⑧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문개정 1995.1.5]	하여 등록기준과 업무범위 등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식회사 법인과 인적기반 법인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과거 건축사법에서 합동사무소를 도입하면서 취한 형태와 유사
 - 1995년 법 개정시의 건축사 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자율적 경쟁을 통한 기술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위배
 - 입법과정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업계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움
- 실적관리는 건축사협회에 임의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적관리를 위해서는 건축주 또는 발주처의 인정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사무소 / 대표자 실적 - 소속 건축사 실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한 실적은 법인이 가지는 조직 및 관리의 역량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법인실적 = 법인실적 + $\Sigma(\text{개인 실적} \times \text{실적 전환율})$ ’의 개념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적전환율 적용비율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의 경우 협업자 지정 및 설계자 인증을 통해 소속건축사도 실적관리가 가능
-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 발주처의 실적증명이 사무소 단위로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인정절차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건축사 실적관리 관련법

건축사법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건축사의 성명·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용역의 명칭·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용도·구조·층수
4. 용역 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 나. 건축허가서
2.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 나. 신고확인증(착공 또는 철거 등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다. 사용승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라. 감리자 변경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발주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적평가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표 3-17]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 항목	국토교통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5,000만원		고시 금액~	건축	기타	-
	미만	이상				
설계공모실적	-	-	-	5	-	-
참여기술자	50	50	50	50	50	50
유사용역수행실적	-	34	15	15	15	15
경영상태	34	-	-	-	-	-
신용도	4	4	10	10	10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	10	15	15
업무중첩도	12	12	10	10	10	10

5) 개선대안 검토

□ 대안1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전문법인 전환

- 건축설계 전문법인만 허용하는 방안(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과 동일)으로서 일정기간(약 2년) 유예기간을 둠
 - 장점
 - 건축사법 제정취지에 부합
 - 타 전문직 법률과 체계가 동일
 - 건축사 위상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단점
 - 기존 법인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
 - 감리회사를 겸한 법인은 회사를 분리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다분야간 협력 작업인 건축설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대안2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양성화

- 건축사사무소 개설권한을 건축사뿐 아니라 상법에 의한 법인에게도 부여하고, 건축사들이 개인사무소, 건축설계전문법인 및 상법에 의한 법인 중 선택하여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
 - 장점
 - 건축사들의 선택기회 확대
 - 위임입법 금지의 문제점 해소
 - 국제화 추세에 대응 가능
 - 대형화 유도 가능
 - 단점
 - 비건축사에 의한 사무소 개설 가속화 예상
 - 엔지니어링 회사와 같은 인식을 받을 가능성
 - 건축전문법인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 마련 어려움

□ 대안2-1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양성화 및 요건강화

- 임원의 과반 이상을 건축사로 할 것을 사무소개설 기준으로 추가
 - 장점
 - 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 부합
 - 건축사들의 선택기회 확대
 - 위임입법 금지의 문제점 해소
 - 국제화 추세에 대응 가능
 - 대형화 유도 가능
 - 단점
 - 기존 법인에게 무리한 요건일 가능성 존재
 -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존재

□ 대안3 : 책임건축사 제도만 도입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개별 건축사가 책임건축사로 지정되면 대표건축사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제도(85년 건축사법에 신설되었다가 95년에 삭제)

- 장점
 - 설계에 대한 책임소재 부여 가능
 - 신진건축가 육성기반 조성 가능
 - 이해관계 대립 최소화 가능
- 단점
 - 소극적 개선안

2.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1) 검토 배경

- 1963년 12월 제정 이후 건축사법은 외국 건축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제도 외에 국제관계를 고려한 내용의 법조문이 부재한 상태로 1990년대 초반까지 변동이 없었음
 - 제정 당시 건축사법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국내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 중 건축법규(1978년 10월), 건축설계(1979년 11월) 과목을 차례로 의무화함
- 1995년 1월 WTO, GATS 가입에 따른 국내 설계시장 개방으로 외국건축사의 국내활동이 가능해짐
 - 1995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건축사도 국내의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999년 UIA 북경총회에서 건축사자격 국제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 문제가 대두됨¹⁵³⁾¹⁵⁴⁾
 -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2000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등록과 면허로 이원화되어 있던 제도를 일원화하고, 2001년에는 5년제 건축학부 과정 개설을 허용함¹⁵⁵⁾
 - UIA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2003년 5월 한국건축단체연합이 공식 출범하였으며¹⁵⁶⁾ 이외에도 실무수련, 자격시험, 계속교육 등의 제도 도입 및 개선과 건축사등록원 설립을 위한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짐¹⁵⁷⁾¹⁵⁸⁾

153)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은 시대적 요구”, 「건축사신문」, 1999년 12월 22일.

154) 대한건축학회 편집부(2000),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 v.44(3), 대한건축학회, p.10.

155) “건축학 5년제 학부과정 도입”, 「매일경제」, 2001년 1월 22일.

156) 한국건축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fika.or.kr> 참조.

157)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은 시대적 요구”, 「건축사신문」, 1999년 12월 22일.

- 한편 2005년 9월에는 APEC 등록건축사 제도가 도입되어 가입국
가간의 자격상호인정이 가능해짐
- 운영주체 등의 문제로 정부 및 단체 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UIA 기준에 따른 자격
상호인정을 위해 필수적인 건축사등록원 설립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지연됨¹⁵⁹⁾¹⁶⁰⁾
 - 2006년 정부가 건축사등록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려하자 대한
건축사협회가 여기에 반발하며 유일한 법정단체인 본 협회가 담당
해야 한다고 주장함¹⁶¹⁾¹⁶²⁾, 여기에 다시 새건축사협의회와 한국건
축가협회가 반발하며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등록원 설립을 주장하
며 대립
 - 대한건축사협회가 등록원 설립비용부담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부로
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자 새건축사협의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2007년에 새로운 법정건축사단체를 설립하려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세 단체의 통합을 주장하고 추진했으
나¹⁶³⁾¹⁶⁴⁾ 2009년 11월 건축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안이 부결되어
통합이 무산됨¹⁶⁵⁾
- 2011년 5월 UIA 건축사자격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당초 2007년 설립예정이었던 건축사등록원도 2012년 5월 정식 출범하게 됨
 - 국제자격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격시험 및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내
용을 담은 법 개정이 2011년 5월에 이루어짐
 - 이때 건축사등록원 관련 법조문은 별도로 신설하지 못하였으나 실
무수련자 관리, 건축사자격등록, 건축사실무교육 등의 업무를 협

158) 대한건축학회 편집부(2000),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 v.44(3), 대한건축학회, pp.10~34.

159) 이필훈(2006), “건축사등록원의 목적과 주체”,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31.

160) 김용미(2010), “건축 3단체 통합 무산 이후”, 「건축과사회」, 통권 제20호, 새건축사협의회, p.10.

161) “건축사등록원 설치위한 건축사법 개정 추진”, 「건축사신문」, 2006년 8월 7일.

162) “건축사등록원 별도 설립 안 된다”, 「건축사신문」, 2006년 8월 7일.

163) “건축사 단체 통합 추진 합의”, 「건축사신문」, 2008년 1월 9일.

164) “건축 3단체’ 통합의 변수”, 「건축사신문」, 2009년 6월 8일.

165) “단체통합 및 정관개정안 부결 충격”, 「건축사신문」, 2009년 11월 11일.

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2년 5월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함으로써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제도의 기본적인 법적토대가 마련되었음

-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자격상호인정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건축계의 노력에 더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¹⁶⁶⁾

[표 3-18] 건축사자격 국가간 상호인정 관련 법 변화

시 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1960 년대	법 제정 (1963.12.16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상호인정 관련규정 부재 -외국건축사에 대한 자격시험 면제 규정만 존재 		
1970 년대	시행령 개정 (1978.10.6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건축사의 자격시험시 법규과목 의무화(필요시 설계과목 추가) 		
	시행령 개정 (1979.11.5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건축사의 자격시험시 설계과목 의무화 		
1980 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EC 가입
1990 년대	법 개정 (1995.7.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건축사 국내 업무 허용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UIA의 건축사자격 국제 기준 발표에 따른 대응 착수 -5년제 건축학과정 준비 -건축사등록원 설립 추진 -수련제도 및 면허, 등록제도 개선 필요 -계속교육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GATS 가입에 따른 설계시장 개방
	시행령 개정 (1995.9.2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건축사의 자격시험시 설계과목 면제 		
2000 년대	법 개정 (2000.4.29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과 면허 제도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등록원 설립지체로 인한 문제와 설립촉구 성토 •실무수련제도 도입 요구 •건축사등록원 운영주체에 관한 논란(별도법인설립이나 정부운영 또는 협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UIA의 교육인증제도 전면적 시행 •5년제 건축학과정 시작 •UIA 건축사상호인정기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공식출범 •새건축사협의회 창립 및 법인인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출범 •APEC 등록건축사 등록 개시 •건축사등록원 운영주체문제 제로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166) 강성익(2012), “대한건축사협회, 새정부에 바라는 건축 어젠더”, 「건축」, v.56(12), 대한건축학회, p.16.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통합 추진 끝에 무산
2010년대	법 개정 (2012.5.3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시험 및 관리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수련제도 신설 -자격시험 응시조건 변경(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졸업 필수, 예비시험 폐지, 기존제도 한시적 병용) -자격관리 강화(자격 등록갱신 제도 신설,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개정안 비판 •건축사 자격상호인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등록원 설립(2012.5.31)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위한 한국건축가연합 출범 준비

2) 현황과 문제점

① 한-미 FTA 전문직 상호인정(MRA) 현황

□ 협정내용

- 상대국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는 상대편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MRA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MRA 대상은 양측 당사국이 합의), 다만 예시로서 건축, 엔지니어링, 수의서비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수준
-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 내용을 해당 국가들이 상호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의 작업을 권장하는 수준

□ 미측 기본입장

- MRA에 대해 갈수록 더 회의적이며, 외국의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다른 방법들이 보다 유용하다는 시각
- 전문직 비자쿼터의 경우 미국은 FTA 협상에서 상대 나라의 제도적 동등성과 수준에 따라 협상 당사국에 특별비자(H-1B¹⁶⁷⁾) 쿼터를 배정¹⁶⁸⁾하였으나, 한국은 미반영¹⁶⁹⁾

167) 고용주의 후원을 받으면서, 미국 임시거주를 원하는 전문가에게 적용, 6년이 지나면 미국을 떠나야 함, 3년 체류 1번 연장가능.

168) 호주(10,500명/년), 멕시코(5,500명/년), 싱가포르(5,400명/년), 칠레(1,400명/년).

169) 미국 이민법은 미국 의회의 관할사항이므로 행정부에게 협상권한이 없다는 미국 의회의 강한 입장에 따라 미반영(미국 의회와 별도 교섭이 필요)

□ 우리나라의 계획(2013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 양측의 제도 관련 추가 정보를 교환
 - 양측 협회간 협의채널을 구축 : 우리 쪽의 주 관심분야 선정
 - 미국 연방 및 해당 주의 전문자격 관련 상세현황을 파악
 - 추가 정보 교환 및 협회간 협의의 진전 등을 감안하여 차기 작업반회의를 개최
- * '12년말까지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미국측과의 접촉 사례는 없었음, 산업부 주관 1차 작업반 회의(2013년 6월 10일)는 미국 대사관 측에서 나왔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질의·답변하는 수준

② 한-EU FTA 전문직 상호인정(MRA) 현황

□ 협정내용

- 해당 국가 관련 대표 전문직 기관이 MRA에 관한 권고 사항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MRA 분야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제15장(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제15.1조에 무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명시. 또한 MRA 작업반은 무역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명시
 - 권한을 지닌 당국¹⁷⁰⁾이 MRA를 협상
- * 권한 위임절차 : EU 집행위원회가 27개의 회원국에게 권한부여를 요청 → EU 집행위원회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럽 이사회 통상정책위원회 및 유럽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 최종적으로 유럽 이사회가 협정서명에 동의
- MRA가 GATS 규정에 합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함

□ EU측 기본입장

- EU는 내부적으로 양쪽 업계의 공통된 관심 분야에서 권고가 있을 경우에 한해 MRA 협상을 개시한다는 입장
 - 대한건축사협회가 2008년 11월부터 ACE(Architects' Council of Europe)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2009년 1월 ACE로부터 MRA 초안을 수령한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음

170) 현재 건축사에 한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과 MRA 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보유

③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현황

-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문직 이동성 촉진을 위한 자격상호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으며, 특히 “나라간 MRA를 체결함에 있어서 자격 동등성 인정 기준의 설립이 가장 중요한 협상의 요소” 에 해당
- 그러므로 “원활한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격상호인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 가 있고¹⁷¹⁾,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건축사법의 개정을 통해 건축사자격 제도를 개선
 - 5년제 건축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자에게도 건축사자격의 취득 기회를 주는 기존 제도와 5년제 건축학부를 졸업한 자에게만 취득 기회를 주는 신규제도, 현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2020년 1월 이후부터 전자가 폐지될 예정
 - 개정 건축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사자격제도는 UIA의 권장안보다 엄격한 미국 기준과 유사

[표 3-19] 건축사자격 관련기준 비교

구분	UIA 권장안	APEC 등록건축사 운영기준	한국 기준	미국 기준
교육	인증(5년)	4년제	인증(5년)	인증(5년)
수련	2년	2년	3년	3년
시험	설계능력검증 필요	자격시험	자격시험	자격시험
등록	등록	등록/면허	등록	등록
갱신	계속교육 의무	계속교육 의무	계속교육 의무	계속교육 의무
실무	-	7년	-	-

※ 출처 : 「건축사법」, NCARB(2012), *Certificate Guidelines*, 국토해양부(2008), 「한미 FTA 자격상호인정 연구」, 국토해양부, p.341..재정리

171) 국토해양부(2008), 「한미 FTA 자격상호인정 연구」, 국토해양부, p.341.

④ 건축사자격 상호인정과 관련한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사자격 제도는 FTA 상대국과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국제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 허나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을 통해 외국의 건축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건축사법에 마련될 필요는 있음

3) 참고사례

① MRA 자격상호인정

□ 자격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개념

- 건축사 자격상호인정은 자격 동등성 요건을 만족하는 양국의 건축사가 각 국가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건축사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
 - MRA의 전제는 FTA를 체결한 해당 국가의 특정한 전문직 서비스 시장이 폐쇄되어 있고, 해당 국가 모두 상대국의 특정한 전문직 서비스시장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함
 - MRA는 특정한 전문직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기에 자격 취득 요건이 상호간 비슷하여야 할 것이지만 필요에 따라 이것 역시 양보할 수 있는 사항임
- 건축설계(CPC 8671) GATS 양허안 내용

[표 3-20] 건축설계 GATS 양허안 내용

구 분	시장접근(MA)	내국인 대우(NT)
Mode 1 (국경간 공급)	상업적 주재 필요	제한없음(None)
Mode 2 (해외소비)	제한없음(None)	제한없음(None)
Mode 3 (상업적 주재)	제한없음(None)	제한없음(None)
Mode 4 (자연인의 이동)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 외에는 양허하지 않음(UNbound)	
추가양허(AC)	•1996년 1월 1일부터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한 외국 건축사의 건축서비스 업무 허용 •외국 건축사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6개 건축사 시험과목 중 건축법규, 건축설계 시험만 합격하면 한국 건축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 ¹⁷²⁾	

□ GATS 양허안(CPC 8671)과 FTA 및 MRA 협상과의 관계

- 국내 건축설계시장이 이미 대폭으로 개방되어 있어¹⁷³⁾ FTA 협상시에 건축 서비스 분야의 협상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가 건축사 MRA의 체결 필요성을 덜 느낌
- 또, 이미 양허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더 완화할 수는 있어도 강화할 수는 없음¹⁷⁴⁾

□ FTA 체결 현황

- FTA 발효 : 8건 45개국

[표 3-21] FTA 체결 현황

상대국	추진 현황	비고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99.12 협상 개시 •'03. 2 서명 •'04. 4 발효 	•최초 FTA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04. 1 협상 개시 •'05. 8 서명 •'06. 3 발효 	•ASEAN과 중복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 1 협상 개시 •'05.12 서명 •'06. 9 발효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4개국)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 2 협상 개시 •'07. 6 상품무역협정 발효 •'09. 5 서비스 협정 발효 •'09. 9 투자협정 발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10개국)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1월 발효 	•CEPA 협상
EU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 5 협상 개시 •'09. 7 협상 타결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체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벨기에, 몰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라트비아, 독일, 마크, 네덜란드, 그리스 (27개국)

172) 외국 건축사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대지계획, 설계1, 설계2) 중에서 대지계획을 면제(건축사법시행령 제8조)

173)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건축설계 GATS 양허 내용이 WTO 회원국 내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개방적 수위가 높음

174) WTO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협상이 완료되면 법적 구속력)과 일반적 의무(투명성)'에 따라서 양허 수위는 후퇴시킬 수 없음

상대국	추진현황	비고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 3 협상 개시 •'11.3.21 서명 •'11.8. 1 발효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6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2.3.15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 이행법” 미국 상·하원 통과('11.10.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1.22)

- 협상타결 : 2건 2개국

[표 3-22] FTA 협상타결 국가 및 추진현황

상대국	추진현황	비고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6~'09.5 공동연구 •'12.3까지 4차 공식협상 개최 •'12.3 가서명(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3~9 민간공동연구 •'12.4까지 6차 공식협상 개최 	

- 협상진행 : 10건 14개국

[표 3-23] FTA 협상진행 국가 및 추진현황

상대국	추진현황	비고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 7 협상 개시 •'08.3까지 13차 협상 개최 	
GCC (걸프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11 사전협의 개최 •'09.7까지 3차 공식협상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6개국)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12 기존 SECA를 FTA로 격상 협상 재개 •'08.6까지 2차 공식협상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경제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5~'08.4 민간공동연구 •'10.5까지 5차 공식협상 개최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2~'08.3 민간공동연구 •'10.5까지 4차 공식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10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 3 협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PA 협상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3~'10.5 산·관·학 공동연구 •'10.9~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12. 5 협상개시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11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4 공청회 개최 	

상대국	추진현황	비고
	•'13.5.22~24 2차 한-베트남 FTA 공식협상(하노이)	
일본	•'03.12 협상개시 •'04.11 6차 협상 후 중단 •'08~'11 협상재개 실무회의 6회 개최	
한중일	•'03~'09 민간공동연구 •'11.12까지 7차례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 종료	

-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 7건 18개국

[표 3-24]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국가 및 추진현황

상대국	추진현황	비고
MERCOSUR (메스코수르)	•'05.5~'06.12 정기간 공동연구 ('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09.7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4개국)
이스라엘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월 종료	
몽골	•'08.10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SACU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08.12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5개국)
러시아	•'05.11 공동전문가그룹 창설 합의 •'07.10.31~11.1 1차 한-러 BEPA 공동연구그룹 회의(서울) •'08.7.8~9 2차 한-러 BEPA 공동연구그룹 회의(모스크바)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 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중미	•'10.10 공동연구 개시 •'11. 4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5개국)
말레이시아	•'11.5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 연구 개시 •'12.4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의 개최	•한-ASEAN FTA Upgrade

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1) 검토 배경

- 1963년 12월 제정 당시 건축사법에는 공제사업이나 공제조합에 관련된 법조문이 부재한 상태였음
 - 이후 건축사들의 노후생활보장대책인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건축사협회가 60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1987년 1월 건축사연금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됨¹⁷⁵⁾
- 법 개정을 통해 연금제도를 공제조합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무산되고 1995년 7월 협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공제사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됨
 - 1992년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건축사 연금제도를 공제조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나¹⁷⁶⁾ 정부의 산하단체 신설억제 방침에 따라 무산됨¹⁷⁷⁾
 -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로 부실로 인한 재해수습 및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화되던 가운데¹⁷⁸⁾¹⁷⁹⁾ 1995년 1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법 조문을 신설함, 이에 따라 협회는 기존의 건축사연금제도를 폐지하고¹⁸⁰⁾ 공제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¹⁸¹⁾ 협회 내 공제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함¹⁸²⁾
- IMF 구제금융 사태, 협회가입 임의화 등으로 인해 공제사업 운영이 어려웠으

175) 김상균, 권문일(1993), “건축사연금의 형성과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21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14~15.

176) “내년중 건축사법 개정키로”, 『연합뉴스』, 1992년 10월 7일.

177) 이종정(1998), “건축사와 보증제도 - 공제사업 하루가 급하다”, 『建築士』, 서울:대한건축사협회, no.354, p.85.

178) “시공보험 가입대상 확대”, 『매일경제』, 1994년 10월 27일.

179) “건설공사 보험 의무가입 대상 대폭 확대”, 『연합뉴스』, 1994년 10월 27.

180) “공제조합 설립 추진 연금폐지 회비제도 개선도 건축사협회”, 『매일경제』, 1995년 6월 27일.

181) “건축사 공제조합 만든다 대한건축사협회”, 『매일경제』, 1997년 8월 25일.

182) “건축사, 공제업무 전담부서 신설”, 『건축사신문』, 1999년 4월 16일.

나 2010년 7월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전면적인 공제사업이 개시됨

- 1997년 12월 IMF 금융위기와 2000년 1월 법 개정에 의한 협회가 입 임의화로 인해 공제사업 운영이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¹⁸³⁾
- 국회 재정위의 반대로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 조문은 신설하지 못했으나¹⁸⁴⁾ 2010년 7월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공제조합을 창립하고 2012년 9월 기준으로 4,000개사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함¹⁸⁵⁾

[표 3-25] 건축사 공제조합 관련 법 변화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1960년대	법 제정 (1963.12.16시행)	●공제사업 관련규정 부재		
1970년대				
1980년대				●건축사연금제도 실시
1990년대	법 개정 (1995.7.1시행)	●협회의 공제사업 등 사업관련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연금제도를 공제조합으로 대체 검토 ●공제사업 및 보험제도 관련조항 신설 추진 ●여려워진 협회운영 정상화위해 연금제도 폐지 ●공제사업 필요성 주장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개정안 입법 추진하나 무산되어 협회 내 공제업무 전담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출범 ●성수대교 붕괴(1994.10.21) ●서울보증보험(주) 출범
2000년대	법 개정 (2000.4.29시행)	●협회 설립 및 가입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감원 관리부담 가중으로 재경위 반대입장이지만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 필요 재주장 	●건설감리공제조합 출범

183) 손원태(2010), “건축사공제조합의 출범에 즈음하여”, 『建築士』, no.49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10.

184) 안우성(2009),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및 보증제도에 의한 건축사 업무 변화”,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107.

18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열려”, 『건축사신문』, 2010년 12월 16일.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2010년대	법 개정 (2011.1.24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또는 공제 의무화 및 공제사업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의 공제사업 참여 독려 •건축사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공제조합 창립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4,000개사 초과

2) 현황과 문제점

□ 공제조합의 정의

- 공제(共濟)의 본질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본에 대한 자기방위책으로 조직된 단체 및 인적 결합체로 조합원의 자격이 조합의 목적에 따라 제한됨
 - 공제조합은 동일 직장 또는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구성하여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
 - 조합원의 각출금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여 우발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부상조를 근거로 설립된 조직
 - 협의의 의미로는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상호부조의 한 방법을 의미하고, 광의의 의미로는 상호간에 서로 구제하며 돕는 것을 뜻함
- 해외는 중세에 들어 특정한 우발적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길드(Gild)제도의 지연단체 생성¹⁸⁶⁾
 - 혈연, 혈족관계를 떠나서 지역단체로 생성된 길드제도는 직업상의 이익을 상호 보호하는 한편 그 조합원의 사망, 화재, 질병,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일정한 각출금을 받아 구제
 - 이러한 길드제도가 13~16세기에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 기능이 분화되어 방위길드에서, 사망, 질병, 도난, 화재, 가축길드까지 생성
 - 해외에서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민영보험과 동일한 법적 규제와 감독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업허가, 모집활동, 책임준비금, 재산운용 등의 부분에 대해 사전·사후적인 감독이 민영 손해보험사와 동

186) 서은영(2008), “공제조합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

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공제제도 현황

- 국내의 공제제도는 1960년대 초반부터 그 기반이 시작되어 점차 범위가 확
충되고 있으며, 운영형태 및 공제특성에 따라 33여개 공제 존재¹⁸⁷⁾
 - 운영형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공제 등 5개가 있으며, 조합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제, 대한교원공제, 육운공제 등 20개, 연회
비로 운영되는 회비제 공제로 경찰공제, 군인공제 등 8개로 총
33여개 공제가 운영되고 있음

[표 3-26] 국내 공제 등 유사보험 분류

구분		대상기관	기관수
주요공제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우체국보험	5
기타공 제	생명	대한교원공제	20
	보증	건설공제, 기계공제, 부동산중개업협회, 소프트웨어공제, 엔지니어 링공제, 전기공사공제, 전문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조선공업협동 조합공제	
	육운	전국개인택시공제, 전국버스공제, 전국전세버스공제, 전국택시공 제, 전국화물자동차공제	
	일반손해	대한의사협회공제, 학교재해복구공제, 한국선주상호보험, 한국지방 재정공제, 한국해운공제	
회비제공제		경찰공제, 관우회, 군인공제, 담배인삼공제, 대한소방공제, 대한지 방해정공제, 세우회, 철도청공제	8
합계			33

※ 출처 : 이재복(2008), “유사보험 감독일원화 시급하다”, 「월간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 그 중에서도 건축분야 관련 공제로는 건설공제, 엔지니어링공제, 전문건설공
제, 주택사업공제, 전기공사공제, 설비공제 등이 있음
- 건설공제조합은 2002년 조합원사가 1만개가 넘어 2006년에는 12,334개사에

187) 김재중(2010), “농협공제조합의 경영효율성과 생산성분석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20.

달하였으며, 총자본금은 2002년에 3조원을 넘은 뒤 2006년 5조원에 달하였음

- 건설공제조합과 보증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를 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후에는 신용평가등급과 기업규모를 반영한 보증한도가 주어지게 되며, 주어진 보증한도 이내에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조합원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 대비 81~85%(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수준에서 별도의 담보 없이 융자 가능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보증은 건설공사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적용됨¹⁸⁸⁾
 - 조합원수와 보증금 및 보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 기준 조합원수는 45,599개, 보증건수 576,220건, 보증금액 149,597억원

[표 3-27] 연도별 전문건설공제조합 현황

구분	조합원수(개사)	보증건수(건)	보증금액(억 원)	부도 조합원(개사)
2001	28,899	331,896	40,736	328
2002	32,215	329,930	45,402	294
2003	35,149	381,881	59,838	291
2004	35,678	419,784	70,720	273
2005	38,152	406,628	78,457	223
2006	39,996	442,675	82,500	181
2007	42,346	472,662	95,661	171
2008	43,727	500,124	111,499	273
2009	45,599	576,220	149,597	155

※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통계연보」, 각 년도.

- 주요사업으로는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등으로 설정·운영

188) 이근철(2010) “전문건설공제의 리스크 측정에 관한 실증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

[표 3-28]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요사업

구분	주요업무
보증업무	건설업영위와 관련하여 공사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지급보증
융자업무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운영자금,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할인 등
공제업무	손해보험인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건설기계공제, 상해공제 등

※ 출처 : 이종광(2009), “전문건설공제의 서비스품질과 미래경쟁력에 관한 실증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9.

□ 건축사공제조합 현황

- 건축사공제조합은 현재 법적근거가 없으나 「건축사법」 제31조의2에 의해 사실상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급금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음

* 「건축사법」 제20조는 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한 모든 건축사사무소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출자금(최소 5좌(50만원) 이상)을 예치하여 가입
- 현재의 건축사공제조합은 조합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대한건축사협회와 완전히 분리된 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한건축사협회는 2010년 2월 25일 제44회 정기총회를 통해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1월 24일에 본격적으로 손해배상공제 및 보증업무를 개시하였음

** 총 조합원 4,518개사(비회원 건축사 533개사 포함), 출자금 49억여원, 수수료 수입 21억 6천만원(2012년 기준)

- 건축사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업무를 위한 약정업무, 입찰·계약·차액·하자보수 보증업무, 운영자금 대출 등 융자업무, 손해배상업무, 출자증권업무 등을 수행
- 손해배상공제는 조합원이 설계·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손해를 조합이 배상

- 계획·중간·실시설계,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감리 등이 공제가
입대상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임찰보증, 계약보증, 선금급 지급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 건축사공제조합의 문제점

-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영리조직으로, 비영리법인인 협회 내의 사업으로는 배당금의 지급, 자본금 및 임원의 등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수혜와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불리한 점이 존재
 - 배당금 지급 문제 : 공제조합은 영리사업으로 수익 발생 시 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여야 하지만, 협회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익 발생 시 배당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이 발생
 - 등기 문제 : 협회 내 사업으로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기도 불가능하며 임원도 등기할 수 없음
 - 세제혜택 불이익 문제 : 공제조합의 결손은 협회의 다른 수익사업과 합산되므로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협회에 납부하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도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세무 경비처리가 불가능
 - 사업의 한계 문제 : 대외 업무수행 시 공제조합이 아닌 대한건축사협회 명칭을 사용하므로 보험·보증·금융 등 조합 고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제조합의 책임경영, 비용절감 측면과 조합원에 대한 이익환원 등을 고려할 때 협회 내 사업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협회회원 중 다수가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상황에서 공제조합의 이러한 문제는 회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쉬움

3) 유사사례 분석

① 전문직 공제조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법에 공제조합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손해배상준비금과 관련하여 공제사업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이외에도 별도의 협회 정관 등을 통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표 3-29] 전문직간 공제사업 비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회원 공제 사업	가입 주체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성격	-	당연가입	당연가입
	내용	-	경조사등 보조사업, 복지연금지급 등 복지사업	경조금 지급, 복지증진사업 등
손해 배상 공제 사업	가입 주체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비소속)	세무사(세무법인 비소속)
	성격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내용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배상금 지급

※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회칙에 공제사업 관련 언급은 없으나 지방변호사회에 공제사업회가 존재하여 공제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손해배상공제사업은 법령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한다는 언급이 있으나 회칙에 관련 내용이 없음

② 기타 분야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발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23개 법에 공제조합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조건, 사업 종류, 의결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표 3-30] 타 분야 공제조합 관련 법 현황

법명	법 조문 목록	시행령 조문 목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	제16조의3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6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제16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법명	법 조문 목록		시행령 조문 목록
건설산업기본법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 공제 규정 제57조의2 보증 규정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제60조 공제조합의 자본 취득 등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5조 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6조 보증금 장수의 제한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61조 운영위원회 제5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53조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제54조 등기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의2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제57조 보증한도 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제62조 수수료·이자 등 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제63조의2 조사 및 검사 제64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제64조의2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제64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장제2 절 공제조합	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제77조 지도·감독 등 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9조 공제규정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5조 협회의 설립 제56조 「민법」 규정의 준용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4조 보증한도 제25조 보증대상 제26조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제2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40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46조 출자금 제47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6조 공제규정 제17조 법인격 제18조 정관의 변경	제5조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6조 조합의 출자 등 제7조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 제8조 보증 등의 한도 제9조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제10조 조합업무의 위탁 제11조 조합의 총회 등 제12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제1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법명	법 조문 목록		시행령 조문 목록
산업발전법	제7장 사업자단체 등	제40조 공제조합 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44조 대리인의 선임 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27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28조 공제사업의 자금 제29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30조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소방산업 공제조합	제23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4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2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26조 공제규정 제27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8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29조 지분의 양도 등 제3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1조 대리인의 선임 제32조 이익금 등의 처리 제33조 배상책임 등	제2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8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29조 감독 등 제30조 사업연도 제31조 예산과 결산 제32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3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34조 공제규정의 승인 제3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36조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장 소프트웨 어공제조 합	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30조 공제규정 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제36조 배상책임 등	제18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19조 정관기재사항 제20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22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제28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조의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2 공제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5조 공제규정 제36조 법인격 등 제37조 임원의 자격 요건 제38조 지도·감독 등 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4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6조 출자 등 제47조 지분의 양도·취득 등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제49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제50조 보증 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공제료 등 제51조 조합의 책임 제52조 조합의 업무 위탁 제53조 조합의 총회 등 제5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공제조합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 공제사업	제2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7조 운영위원회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법명	법 조문 목록		시행령 조문 목록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 조정 절차 등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74조 조정의 효력 등	제29조 공제분쟁의 조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의료배상 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9조 부담금 등 제30조 「민법」의 준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3조 부담금 등 제24조 「민법」의 준용		제1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6조 조합의 사업 제47조 대리인의 선임 제48조 지분의 양도 등 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50조 조합의 책임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3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4조 보증범위 제45조 보증한도 제46조 수수료·이자 등 제47조 조합의 감독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장(2) 콘텐츠공제조합	제20조의2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3 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5 공제규정 제20조의6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0조의7 공제조합의 책임 제20조의8 지분의 양도 등 제20조의9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0조의10 대리인의 선임 제20조의11 배상책임 등 제20조의12 이익금의 처리	제18조의2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8조의3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4 공제조합의 등기 제18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8조의6 공제조합의 사업 제18조의7 기본재산의 조성 제18조의8 공제규정의 승인 제18조의9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18조의10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18조의11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18조의12 예산과 결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5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6 조합의 사업 제10조의7 부담금 제10조의8 「민법」의 준용		

법명	법 조문 목록		시행령 조문 목록
폐기물관리법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 조합의 사업 제43조 분담금 제44조 「민법」의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0조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31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17조 출자금 제18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9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20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사업자 단체	제51조 공제사업 제5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4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5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6 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7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8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9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1조의10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 분쟁조정 신청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3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1조의4 운영위원회 제11조의5 재무건전성

[표 3-31] 타 분야 법령간 공제조합 제도 비교

법	조합 성격	인가주체	설립 조건	사업종류	의결권	운영 위원회	준용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 공제조합	공정거래 위원회	10인이상이 발기 ¹⁸⁹⁾	정관 준용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 공제조합	국토교통 부장관	200인이상이 발기, 1/3이상 정관에 동의	보증, 융자, 어음할인, 기자재 구매알선, 복지, 손해공제, 연구, 교육, 편의증진, 수익사업 등	-	25인 이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공제조합	환경부장관	-	보증, 융자, 어음할인, 복지, 손해공제, 편의증진, 투자 등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

법	조합 성격	인가주체	설립 조건	사업종류	의결권	운영 위원회	준용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공제조합	공정거래 위원회	10인이상이 발기, 1/20이상 정관에 동의	소비자피해보상, 출판, 교육, 시장 자율정화, 위탁사업 등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방사선등 이용주체 공제조합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	보증, 융자, 도산방지, 복지, 손해공제, 기자재 알선, 투자, 위탁사업 등	출자 1좌당 1개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
산업발전법	자본제공제조합, 조선공제조합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10인이상이 발기 ¹⁹⁰⁾	보증, 융자, 기자재 구매알선, 손실보상, 복지, 위탁사업 등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 공제조합	소방방재 청장	10인이상이 발기	보증, 융자, 투자, 위탁판매, 공동구매, 장비보급, DB 구축·운영 등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자 공제조합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10인이상이 발기	보증, 융자, 투자, 성능보험 등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사업자 공제조합(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보증, 융자, 매출채권 팩토링, 어음할인, 복지, 투자 등	-	-	-
에너지이용사업 진흥법	에너지이용사업자 공제조합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보증, 융자, 어음할인, 기자재 구매알선, 기술훈련 지원, 도산방지, 복지, 투자, 위탁사업 등	출자 1좌당 1개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국토교통부 장관	1/100이상이 발기, 200인 이상 정관에 동의	배상, 손해공제, 복지, 연구 등	-	25인 이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인단체, 보건의료기관단체 공제조합	보건복지부 장관	-	배상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법	조합 성격	인가주체	설립 조건	사업종류	의결권	운영 위원회	준용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환경부장관	-	-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환경부장관	-	-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자 공제조합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10인이상이 발기, 1/50이상 정관에 동의	정관 준용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사업자 공제조합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10인이상이 발기	보증, 융자, 투자, 연구, 교육, 위탁사업, 수익사업 등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정화업자 공제조합	환경부장관	-	토양정화 공제사업, 기술 조사·개발·보급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 공제조합	-	-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공제조합	공정거래 위원회	10인이상이 발기	소비자피해보상, 권익보호 공익사업, 출판, 교육, 시장 자율정화사업, 위탁사업 등	-	-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국토교통 부장관	1/100이상이 발기	배상, 손해공제, 복지, 연구 등	-	25인 이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

4)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 건축사공제조합의 독립적 분리근거 마련 필요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분리된 공제조합이 수행하도록 하여 건축사공제조합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유관 분야에서는 이미 건설공제조합('63. 10), 전문건설공제조합('88, 3), 전기공사공제조합('83, 8), 엔지니어링공제조합('89, 11) 등의 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건설감리협회 내에서 운영 중인 감리공제조합도 별도 법인설립을 위한 법안이 2013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인설립을 준비 중에 있음

189) 다만, 특정 업종의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 가맹본부 총수의 10%에 달하는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90)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4.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

1) 검토 배경

- 1963년 12월 제정 당시 건축사법에는 위탁사업에 관련된 법조문이 부재한 상태였음
 - 정부가 시험관리, 건축사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옴
- 1982년 4월 건축사협회에 대한 위탁사업 관련규정이 최초로 신설되었으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비판이 제기됨
 - 건축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건축사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982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음¹⁹¹⁾
 - 관료에 의한 자격시험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협회가 고시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자격시험에 참여해야 함을 주장¹⁹²⁾
- 시장개방을 위한 WTO 체제 출범과 자격상호인정을 위한 UTA의 국제기준 등으로 인해 건축사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증가하고 구체화됨
 - 1995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건축사보 신고, 자격시험 관리, 외국 건축사 업무수행 신고 업무가 협회에 추가로 위탁되었으며, 보수 [연수]교육은 소속건축사와 건축사보를 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됨
 - 2002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적관리 업무가 협회에 추가로 위탁됨
 - 2011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실무수련자 관리, 건축사보 신고 접수, 건축사 자격시험 관리, 건축사 자격 관리,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 실무교육의 총 6가지 업무가 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정비됨

191) 이승우(1987), “건축사 보수교육 유감”, 『建築士』, no.21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6.

192) 최창규(1988), “이 시대 건축사들의 독백 - 건축사 국가고시를 중심으로”, 『建築士』, no.22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33~34.

- 건축사법 제정 이래로 위탁사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보조를 뒷받침하는 법 조문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임

[표 3-32] 위탁사업 관련 법 변화

시 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1960 년대	법 제정 (1963.12.16시행)	•위탁 관련규정 부재		
1970 년대			•계속교육 도입 등 건의	
1980 년대	법 개정 (1982.7.1시행)	•건축사협회 등에 보수교육 위탁규정 신설	•확실적인 보수교육규정의 개선 필요성 제기 •자격시험 개선 요구 -협회의 시험관리 참여 허용	
1990 년대	법 개정 (1995.7.1시행)	•연수교육대상 확대(소속건축사/건축사보 포함) •협회 위탁규정 신설 -건축사보 신고, 자격시험 관리, 외국건축사 업무수행 신고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수련제도 구체화, 면허와 등록 단일화, 계속교육 강화 등	•WTO , GATS 가입에 따른 설계시장 개방
2000 년대	시행령 개정 (2002.3.18시행)	•협회 위탁규정 추가 -실적관리		•UIA 건축사상호인정기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2010 년대	법 개정 (2012.5.31시행)	•협회 위탁규정 확대 및 정비(실무수련자 관리, 등록 등) •실무교육 의무화		•건축사등록원 설립(2012.5.31)

2) 현황과 문제점

□ 건축사 위탁사업 현황

- 수탁기관: 건축사협회
- 위탁사업 종류
 - 실무수련자 관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 동안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신고 접수 또는 확인 등을 의미
 - 건축사보 신고 접수: 실무수련자나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기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등의 신고 접수를 의미
 - 건축사 자격시험 관리: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시험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것

- 등록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시험합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부처에 등록하고 증서를 발급받거나 반납하는 것
 -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 건축주 등이 건축사의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 업무 실적을 수집·관리·제공하는 것
 - 교육: 자격유지를 위해 갱신등록을 하기 전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의미
- 위탁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관련 법적 근거 부재한 상황

3) 유사사례 분석

① 전문직 위탁사업 현황

[표 3-33] 전문직 관련법과 건축사법의 위탁사업 제도 비교

구분	적용법	위탁사업					
		실무수련자 관리	사보 신고 접수	자격시험	등록 접수	실적 관리	교육
건축사	건축사법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변호사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	-	법무부 ¹⁹³⁾ 소관	대한변호사협회 소관	지방변호사회 소관	대한변호사협회 소관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	-	금융감독원에 위탁	공인회계사협회에 위탁(개인)	-	공인회계사회 소관
					금융위원회 소관(회계법인)		
세무사	세무사법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세무사회에 위탁(개인)	-	세무사회 소관
					기획재정부 소관(세무법인)		

※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2항을 바탕으로 표의 위탁사업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함

193)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타 분야 위탁사업 현황

[표 3-34] 자격별 위탁사업 경비지원 개요

구분	위탁 사업 종류	위탁 기관	비용보조근거 법조문 존재	해당 자격
국가 자격	국가 기술 자격	한국산업인 력공단	0	각종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기타 관련기관	0	게임그래픽전문가, 무선설비기능사, 광산보안기능사, 비서1급, 방사선관리기술사, 정보보안기사, 영상기능사, 미용사 등
	기타 국가 자격	한국산업인 력공단	0	문화재수리기술자,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X	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관세사,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감정사 등
		기타 관련기관	0	의사, 한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수산질병관리사, 무대예술전문인, 무선종사자, 원자로조종감독자, 보육교사 등
			X	건축사, 공인회계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표 3-35] 비용 보조를 받는 국가자격 위탁사업 예시

구분	적용법	위탁사업					
		실무수련 자 관리	사보 신고 접수	자격 시험	등록 접수	실적 관리	교육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법	-	-	관련 기관에 위탁, 경비 지원	-	-	관련기관에 위탁, 경비 지원
의사/치과의사/한의 사/조산사/간호사	의료법	-	-	관련 기관에 위탁, 예산 보조	보건복지 부 소관	-	중앙회 소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 법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	-	한국사회복지 시험회에 위탁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 법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	-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 비용 보조	-	-	한국전통문화 대학교에 위임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	-	-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	-	-

구분	적용법	위탁사업					
		실무수련 자 관리	사보 신고 접수	자격 시험	등록 접수	실적 관리	교육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 비용 보조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	관련 기관에 위탁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	-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 비용 보조	공인노무 사회에 위탁, 비용 보조	-	공인노무사회 에 위탁, 비용 보조
감정평가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 비용 보조	국토교통 부 소관	-	-
무선종사자	전파법	-	-	한국전파진흥 원에 위탁, 비용 보조	-	-	-
원자로조종감독자/원 자로조종사/핵연료물 질취급감독자 등	원자력안전법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	-	-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약사/한약사	약사법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	-	약사회, 한약사회에 위탁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관련 기관에 위탁, 장소/인력 지원 가능	-	-	관련 기관에 위탁

※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2항을 바탕으로 표의 위탁사업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함

[표 3-36] 국토교통부소관 자격 위탁사업 비교

구분	적용법	위탁사업					
		실무수련 자 관리	사보 신고 접수	자격시험	등록 접수	실적 관리	교육
건축사	건축사법	대한건축 시험회에 위탁	대한건축 시험회에 위탁	대한건축시험 회에 위탁	대한건축 시험회에 위탁	대한건축 시험회에 위탁	대한건축시험 회에 위탁
감정평가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 비용 보조	-	-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	-	-	-
교통안전관 리자	교통안전법	-	-	교통안전공단 에 위탁	-	-	-

구분	적용법	위탁사업					
		실무수련 자 관리	사보 신고 접수	자격시험	등록 접수	실적 관리	교육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	-	- (국토교통부 소관)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운수종사자 1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항공법	-	-	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등에 위탁	-	-	관련 기관에 위탁, 비용 보조
주택관리사 보	주택법	-	-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	-	-	관련 기관에 위탁

※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2항을 바탕으로 표의 위탁사업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함

194) 버스운전자, 철도차량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화물운송종사자,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등을 말한다.

5. 건축사 징계제도 관련 개선 방향

1) 검토 배경

- 1963년 12월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 면허취소,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폐쇄, 벌칙과 벌칙에 따른 양벌규정을 명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징계요건 추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벌금 인상,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처벌 강화 등 징계와 관련하여 경미한 법 개정이 이루어짐¹⁹⁵⁾
 - 1977년 12월, 1984년 12월, 1995년 1월의 법 개정을 통해 건축사 면허취소 요건,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폐쇄 요건, 벌칙 요건이 늘어났으며,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부실로 인한 재해발생에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이 추가되었고, 벌금은 꾸준히 인상되었음, 일부 벌칙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등록취소의 경우 취소 전에 체결한 계약에 한해 업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외 조항이 신설됨
 - 업무범위를 위반한 자의 무조건적인 건축사사무소등록 취소를 규정한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대해 1995년 2월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1996년 12월 법 개정시 해당 호를 등록취소요건에서 제외함¹⁹⁶⁾
- 2011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제도를 신설함
 - 독일 건축사법과 비교했을 때 징계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이나 징계위원회, 공소시효와 같은 법률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됨¹⁹⁷⁾
 - 2011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건축사징계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계 내용 및 절차가 함께 마련됨

195) “건설관련 법령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 「연합뉴스」, 1994년 10월 24일.

196) “현재, 건축사법 28조 1항2호는 위헌”, 「연합뉴스」, 1995년 2월 24일.

197) 남윤옥, 이명주(2009), “한국 건축사법과 독일 건축사법 비교 분석”,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154.

[표 3-37] 건축사 징계 관련 법 변화

시기	관련 법 변화		관련 논의	관련 사회 이슈
	구분	내용		
1960년대	법 제정 (1963.12.16시행)	•규정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1970년대	법 개정 (1978.7.1시행)	•벌칙 강화(벌금 인상 등) •등록취소 후 업무계속에 관한 규정 신설 -취소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업무 가능		
1980년대	법 개정 (1985.1.1시행)	•벌칙 조정 및 강화(벌금 인상 등) •면허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 강화		
1990년대	법 개정 (1995.7.1시행)	•벌칙 강화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처벌규정 강화 추진	•성수대교 붕괴(1994.10.21)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는 사무소등록취소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대해 위원 판결
	법 개정 (1996.12.30시행)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사사무소등록 필요취소 요건 중 제2호 업무범위위반행위는 제외		
2000년대			•징계관련 법률 체계화 필요성 제기(독일법과 비교)	
2010년대	법 개정 (2012.5.31시행)	•벌칙 조정 -징계위원회 제도 도입 등		

2) 참고사례

□ 전문직 징계관련 법조문 비교

- 건축사법의 경우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내용이 기타 전문직 특별법의 처벌 내용에 비해 그 정도가 가벼운 조항 일부 존재

[표 3-38] 보고 및 검사 부실 관련 법조문 비교

법령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징계 대상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축 사법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제28조제1항제8호, 제41조제1항제2호, 시행령별표2]	행위자 (건축 사일 경우)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50만원 과태료			
				검사 거부·방 해·기피	100만원 과태료			
			행위자 (건축사보나 실무수련자일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법령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징계 대상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축사 사무소	보고 미이행·거짓보고	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변호사법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	제117조제1항	행위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제28조의2, 제117조제2항제1·2호	행위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부장관에게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제58조의9제2항, 제117조제2항제5호	행위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제58조의21제1항, 제117조제2항제6호	행위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가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함	제89조의4제1항·제2항, 제117조제2항제8호	행위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인 회계사법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함	제39조제1항제4조, 제30조제2항	회계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정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함	제39조제4조, 제38조	회계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	제53조제2항제1조	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제1항제4조, 제15조제1항·제3항	회계법인(행위주체인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세무사법	정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함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세무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이내 기간의 세무대리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제12조,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세무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이내 기간의 세무대리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			

[표 3-39]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 관련 법조문 비교

법령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징계 대상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축사 법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제41조제1항제1조	행위자	50만원 과태료	70만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변호사 법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 법무법인인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제112조제3호 제6호	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공인회 계사법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제54조제2항제1호	행위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세무사 법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제22조의2 제2호, 제24조	행위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무법인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장 건축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및 해설

1. 건축법인 제도 도입
2.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4.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5. 건축사 징계제도 개정
6. 기타

1. 건축법인 제도 도입

1) 대안1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전문법인 전환

□ 조문 목록

[표 4-1] 건축사법 개정(안) 대안1 조문 목록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삭제 <2011.5.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삭제 <2011.5.30>
제2장 자격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자격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제15조 삭제 <2011.5.30>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제15조 삭제 <2011.5.30>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 삭제 제17조(수수료)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 삭제 제17조(수수료)
제 3 장 의 2 자 격 등 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신설>	제 3 장 의 2 자 격 등 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4(건축사자격 국가 간 상호 인정)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삭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삭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5장 건축 사 사 무 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조 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보고·검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 건축 사 사 무 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조 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보고·검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계속교육)
<신설>	<신설>	제 5 장 의 2 건축법인	제31조(설립) 제32조(설립 절차) 제33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34조(등기) 제35조(구성원 등) 제36조(자본 총액 등) 제37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38조(회계처리 등) 제39조(구성원의 책임) 제40조(수임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1조(손해배상 준비금 등) 제42조(인가취소) 제43조(해산) 제44조(통지) 제45조(명칭) 제46조(구성원의 탈퇴) 제47조(사무소) 제48조(업무 및 업무집행 등) 제49조(준용규정)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현 행		개 정 안	
제 5 장 의 2 징계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 5 장 의 3 징계	제51조(징계) 제52조(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건축 사협회	제31조(건축사협회) 제31조의2(사업)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제33조 삭제 (2011.5.30) 제34조 삭제 (2011.5.30) 제35조(위임 규정) 제36조(「민법」의 적용) 제37조 삭제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제38조의2(감독)	제6장 건축 사협회 등	제53조(건축사협회) 제54조(사업) 제55조(주사무소와 지부) - - 제56조(위임 규정) 제57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 제58조(감독) 제59조(「민법」의 적용)
〈신설〉	〈신설〉	제 6 장 의 2 건축사공제 조합	제60조(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1조(이사회)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제63조(공제규정) 제64조(보증규정) 제65조(보험업법 적용의 배제) 제66조(지분의 양도) 제67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조사 및 감독 등) 제69조(공제조합의 책임) 제7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 6 장 의 2 보칙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6 장 의 3 보칙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 [총전의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11.5.30)] 제43조 삭제 (1984.12.31)	제7장 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

□ 제31조 설립

[표 4-2]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1조(설립) 건축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인(유한)이하 '건축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제도 도입 필요

- 개요
 - 건축사에 의한 건축법인(유한) 설립 근거 규정 마련
- 기대효과
 -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 제32조 설립 절차

[표 4-3]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2조(설립 절차) 건축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건축사가 정관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을 설립할 때 따라야 할 절차적 기준 규정
- 해설
 - 건축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될 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 정관의 기재 사항

[표 4-4]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3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3조(정관의 기재 사항) 건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건축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건축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개요
 - 정관에 건축법인의 정체성, 대표 정보,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규정
- 해설
 - 정관 기재 사항 : 건축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대표 구성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자본 총액 및 구성원별 출자좌수, 구성원 가입·탈퇴 관련 사항, 구성원 회의 관련 사항,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과 해산사유(필요한 경우)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제34조 등기

[표 4-5]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4조(등기) ① 건축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건축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건축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건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개요
 -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법인(유한)의 등기 필요
- 해설
 - 설립인가 후 2주 내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5조 구성원 등

[표 4-6]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5조(구성원 등) ① 건축법인은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div> <div>1.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div> <div>2.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제20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한 자</div> <div>3.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건축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div> </div> ② 건축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건축사를 둘 수 있다. ③ 건축법인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div> <div>1. 구성원이 아닌 자</div> <div>2. 설립인가가 취소된 건축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div> <div>3. 제55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div> </div> ⑤ 건축법인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건축사이어야 한다.

- 제안이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건축법인(유한)의 구성원 규모와 구성원 아닌 건축사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 필요
- 개요

건축법인(유한)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기준에 대한 규정

- 해설
 - 5명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건축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성원 중 2명 이상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축사여야 함
 - 건축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건축사를 소속건축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의 건축법인(유한)이 어떤 이유로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
 - 구성원 중 3명 이상을 이사로 하되, 자신이 이사였을 때 건축법인(유한)이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자는 이사의 자격이 없음
 - 건축사인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기대효과
 - 건축법인(유한)이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피고용인인 소속건축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 지는 동시에 건축법인(유한)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 제36조 자본 총액 등

[표 4-7]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6조(자본 총액 등) ① 건축법인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건축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건축법인(유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본 규모에 대한 규정 필요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의 자본 총액, 구성원 출자금액 및 좌수와 그밖의 관련 사항을 규정
- 해설
 -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 출자 1좌는 1만원, 각 구성원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으로 규정
 -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즉 자본이 5억 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나 증여를 통해 부족한 금액을 메꾸어야 함, 이때의 증여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 위의 경우 건축법인(유한)이 증자나 증여를 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도록 명시

- 입법례

번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 제37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표 4-8]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7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7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건축법인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건축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 제안이유
 -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
- 개요
 - 다른 법인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거나 채무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
- 해설
 - 건축법인(유한)이 자기자본의 50%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타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제한

- 이때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새로 설립된 건축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을 말함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 제38조 회계처리 등

[표 4-9]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8조(회계처리 등) ① 건축법인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법인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p>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건축사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 건축법인(유한)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적정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 제39조 구성원의 책임

[표 4-10]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9조(구성원의 책임) 건축법인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의 채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범위 규정
- 해설
 -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40조 수임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표 4-1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0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0조(수임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건축사[담당건축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법인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업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업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건축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건축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건축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안이유
 - 수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 필요
- 개요
 - 수임업무를 맡은 담당건축사가 위임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해설
 - 고의나 과실로 수임업무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담당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이때 담당건축사를 직접 지휘 또는 감독한 구성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
- 기대효과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임인의 재산권 보호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41조 손해배상 준비금 등

[표 4-12]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1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1조(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건축법인은 수임업무와 관련한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개요

- 손해배상의 사유 발생 시 건축법인(유한)이 손해배상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준비금 제도 규정

- 해설

-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건축법인(유한)으로 하여금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 인가취소

[표 4-13]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2조(인가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3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의 인가취소 기준을 규정
-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유한)이 ①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하였거나 ②이사 중 누군가가 이 법에 따라 부적격자가 되었는데 3개월이 지

나도록 개입하지 않았거나 ③이 법을 어기고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했거나 ④회계처리 기준을 어겼거나 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 하지 않았거나 ③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법을 어겼을 경우 설립인 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건축법인(유한) 설립인가 취소 시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건축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법을 준수하 도록 함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 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제43조 해산

[표 4-14]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3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3조(해산) ① 건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p>② 건축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p>

현 행	개 정 안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의 해산에 관한 기준 규정
- 해설
 - ①정관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②구성원 과반수와 구성원 의결권의 75%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거나 ③합병하였거나 ④파산하였거나 ⑤설립인가가 취소되었거나 ⑥존립 기간을 지났을 경우 건축법인(유한)은 해산하게 됨
 - 건축법인이 해산했을 때는 그 즉시 지방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통지

[표 4-15]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4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4조(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건축사

현 행	개 정 안
	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의 주요 변동 사항을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알 수 있도록 함
-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유한)의 인가, 인가취소, 해산, 합병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함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5조 명칭

[표 4-16]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5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5조(명칭) ① 건축법인은 그 명칭 중에 건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인이 아닌 자는 건축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안이유
 - 건축법인이 건축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 필요

- 개요
 - 건축법인이라는 문자 사용과 관련한 규정 마련
- 해설
 - 건축법인(유한)은 반드시 사무소 명칭에 건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 건축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건축법인이라는 문자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음
- 기대효과
 - 건축법인이라는 문자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표 4-17]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6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안이유
 - 구성원이었던 자의 탈퇴에 관한 규정 필요
- 개요

-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해설

- 임의 탈퇴 기준 : 없음
- 당연 탈퇴 기준 : ①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②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상실한 경우 ③건축사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그밖에 정관에서 정해놓은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7조 사무소

[표 4-18]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7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7조(사무소) ① 건축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건축사는 건축법인 외에 따로 건축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사무소 개업·이전 시 신고하도록 규정

- 해설
 - 건축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규정
 - 건축법인(유한)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즉시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구성원과 소속건축사는 자신이 속한 건축법인(유한) 외에 별도의 건축사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제한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제48조 업무 및 업무집행 등

[표 4-19]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8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8조(업무 및 업무집행 등) ① 건축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건축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건축사(이하 “담당건축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건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p> <p>③ 건축법인은 담당건축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건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p> <p>④ 건축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p>

현 행	개 정 안
	<p>이를 수임업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건축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담당건축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건축법인을 대표한다.</p> <p>⑥ 건축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건축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p>

- 제안이유
 - 건축법인(유한)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준과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실적 관리방법 필요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할 건축사의 책임 및 권한과 실적 관리방법을 규정
- 해설
 - 건축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는데 만약 담당건축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건축사로 간주
 - 담당건축사가 구성원이 아닌 소속건축사인 경우에는 구성원을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명시
 - 담당건축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업무 위임인에게 즉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건축사가 해당 건축법인(유한)을 대표하도록 명시
 - 건축법인(유한)이 작성하는 업무관련 문서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건축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수임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소재 명확화 가능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입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49조 준용규정

[표 4-20]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49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9조(준용규정) 건축법인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55조, 제56조를 준용한다.

- 개요

– 건축법인(유한)이 건축사법의 기타 조문에 따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

- 해설

– 건축사법 제2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등), 제30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3조(보고·검사 등), 제

55조(징계), 제56조(건축사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표 4-2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1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건축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개요
 - 건축법인(유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규정
- 해설
 -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 대안2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양성화

□ 조문 목록

[표 4-22] 건축사법 개정(안) 대안2 조문 목록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삭제 <2011.5.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삭제 <2011.5.30>
제2장 자격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자격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제15조 삭제 <2011.5.30>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 삭제 제17조(수수료)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제15조 삭제 <2011.5.30>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 삭제 제17조(수수료)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신설>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4(건축사자격 국가 간 상호 인정)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삭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삭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조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보고·검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조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보고·검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계속교육)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 5 장 의 2 건축법인	제31조(설립) 제32조(설립 절차) 제33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34조(등기) 제35조(명칭) 제36조(구성원 등) 제37조(구성원의 탈퇴) 제38조(사무소) 제39조(업무집행 방법) 제40조(구성원의 책임) 제41조(수임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2조(인가취소) 제43조(해산) 제44조(통지) 제45조(준용규정) 제4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 5 장 의 2 징계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 5 장 의 3 징계	제47조(징계) 제48조(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건축 사협회	제31조(건축사협회) 제32조의2(사업) 제33조(주사무소와 지부) 제34조 삭제 <2011.5.30> 제35조 삭제 <2011.5.30> 제35조(위임 규정) 제36조(「민법」의 적용) 제37조 삭제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제38조의2(감독)	제6장 건축 사협회 등	제49조(건축사협회) 제50조(사업) 제51조(주사무소와 지부) - - 제52조(위임 규정) 제53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 제54조(감독) 제55조(「민법」의 적용)
〈신설〉	〈신설〉	제 6 장 의 2 건축사공제 조합	제56조(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7조(이사회)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9조(공제규정) 제60조(보증규정) 제61조(보험업법 적용의 배제) 제62조(지분의 양도) 제6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4조(조사 및 감독 등) 제65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 6 장 의 2 보칙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6 장 의 3 보칙	제6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 [총전의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11.5.30>] 제43조 삭제 <1984.12.31>	제7장 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양벌규정) 제71조(과태료) - -

□ 제31조 설립

[표 4-23]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1조(설립) 건축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및 실적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제도 도입 필요
- 개요
 - 건축사에 의한 건축법인 설립 근거 규정 마련
- 기대효과
 -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건축사들의 실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32조 설립절차

[표 4-24]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2조(설립 절차) 건축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요
 - 건축법인을 설립할 때 따라야 할 절차적 기준 규정

- 해설
 - 건축법인의 구성원이 될 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 정관의 기재사항

[표 4-25]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3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3조(정관의 기재 사항) 건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건축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건축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개요
 - 정관에 건축법인의 정체성, 대표 정보,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규정
- 해설
 - 정관 기재 사항 : 건축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대표 구성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구성원 가입·탈퇴 관련 사항, 출자 종류와 가액 및 평가기준 관련 사항,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과 해산 사유(필요한 경우)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34조 등기

[표 4-26]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4조(등기) 건축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건축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건축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 개요
 -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법인의 등기 필요
- 해설
 - 설립인가 후 2주 내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정관과 기타 법인 관련 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5조 명칭

[표 4-27]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5조(명칭) ① 건축법인은 그 명칭 중에 건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인이 아닌 자는 건축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안이유
 - 건축법인이 건축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 필요
- 개요
 - 건축법인이라는 문자 사용과 관련한 규정 마련
- 해설
 - 건축법인은 반드시 사무소 명칭에 건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 건축법인이 아닌 자는 건축법인이라는 문자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음
- 기대효과
 - 건축법인이라는 문자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6조 구성원 등

[표 4-28]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6조(구성원 등) ① 건축법인은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 2.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제20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건축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p>② 건축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건축사를 둘 수 있다.</p> <p>③ 건축법인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p>

- 제안이유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건축법인 구성원 규모와 구성원 아닌 건축사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 필요
- 개요
 - 건축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기준에 대한 규정
- 해설
 - 5명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건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성원 중 2명 이상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축사여야 함

- 건축법인은 구성원 아닌 건축사를 소속건축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의 건축법인이 어떤 이유로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
- 기대효과
 - 건축법인이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을 갖추 수 있으며 피고용인인 소속건축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 짐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제37조 구성원의 탈퇴

[표 4-29]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7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7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51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안이유
 - 구성원이었던 자의 탈퇴에 관한 규정 필요
- 개요
 -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해설
 - 임의 탈퇴 기준 : 없음
 - 당연 탈퇴 기준 : ①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②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상실한 경우 ③건축사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그밖에 정관에서 정해놓은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8조 사무소

[표 4-30]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8조(사무소) ① 건축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요
 - 건축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사무소 개업·이전 시 신고하도록 규정
- 해설
 - 건축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규정

- 건축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즉시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제39조 업무집행 방법

[표 4-3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9조(업무집행 방법) ① 건축법인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p> <p>② 건축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건축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건축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건축법인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건축사(이하 "담당건축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건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p> <p>⑤ 건축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업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건축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 담당건축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건축법인을 대표한다.</p> <p>⑦ 건축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건축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p> <p>⑧ 건축법인은 법인설립 이전의 구성원 실적을 합산하여 신설된 법인의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 제안이유
 - 건축법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준과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실적 관리방법 필요
- 개요
 - 건축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할 건축사의 책임 및 권한과 실적 관리방법을 규정
- 해설
 - 건축법인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업무를 집행하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 한해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
 - 정관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설치 가능
 - 건축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는데 만약 담당건축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건축사로 간주
 - 담당건축사가 구성원이 아닌 소속건축사인 경우에는 구성원을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명시
 - 담당건축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업무 위임인에게 즉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건축사가 해당 건축법인을 대표하도록 명시
 - 건축법인이 작성하는 업무관련 문서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건축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도록 함
 - 건축법인이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구성원들의 법인설립일 이전 실적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 수임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소재 명확화와 건축사들의 실적 공유 가능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입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8조의23(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0조 구성원의 책임

[표 4-32]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0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0조(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건축법인의 채무(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안이유
 - 건축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 필요
- 개요
 - 구성원들이 건축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도록 규정
- 해설
 - 채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들이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건축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되 건축사법 제45조(수입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채무는 제외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41조 수임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표 4-33]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1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1조(수임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건축사(담당건축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법인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업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업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건축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담당건축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건축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p>

- 제안이유
 - 수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 필요
- 개요
 - 수임업무를 맡은 담당건축사가 위임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해설
 - 고의나 과실로 수임업무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담당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이때 담당건축사를 직접 지휘 또는 감독한 구성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

-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구성원도 조합의 재산 범위 내에서 함께 책임을 짐

- 기대효과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임인의 재산권 보호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42조 인가취소

[표 4-34]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2조(인가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법인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개요

- 건축법인의 인가취소 기준을 규정

-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이 ①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하였거나 ②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③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법을 어겼을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건축법인 설립인가 취소 시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건축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법을 준수하도록 함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제43조 해산

[표 4-35]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3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3조(해산) ① 건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건축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개요
 - 건축법인의 해산에 관한 기준 규정
- 해설
 - ①정관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②구성원 과반수 또는 정관으로 정한 비율의 동의가 있거나 ③설립인가가 취소되었거나 ④존립 기간을 지났을 경우 건축법인은 해산하게 됨
 - 건축법인이 해산했을 때는 그 즉시 지방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통지

[표 4-36]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4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4조(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요
 - 건축법인의 주요 변동 사항을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알 수 있도록 함
-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인의 인가, 인가취소, 해산, 합병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지방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함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5조 준용규정

[표 4-37]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5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5조(준용규정) 건축법인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를 준용한다.

- 개요

- 건축법인이 건축사법의 기타 조문에 따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

- 해설

- 건축사법 제2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등), 제30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3조(보고·검사 등), 제51조(징계), 제52조(건축사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 제46조 다른 법률의 준용

[표 4-38]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2 제46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건축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요
 - 건축법인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
- 해설
 -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입법례

번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범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3) 대안3 : 책임건축사 제도만 도입

□ 조문 목록

[표 4-39] 건축사법 개정(안) 대안3 조문 목록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삭제 <2011.5.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삭제 <2011.5.30>
제2장 자격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2장 자격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제15조 삭제 (2011.5.30)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 삭제 제17조(수수료)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제15조 삭제 (2011.5.30)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 삭제 제17조(수수료)
제 3 장 의 2 자 격 등 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신설)	제 3 장 의 2 자 격 등 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4(건축사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신설)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삭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0조의1(건축사의 손해배상)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삭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5장 건축사 사무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삭제 (1995.1.5) (신설)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조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보고·검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 건축사 사무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3조의3(담당건축사의 지정 등)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조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보고·검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계속교육)
제 5 장 의 2 징 계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 5 장 의 2 징 계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건축사협회	제31조(건축사협회) 제31조의2(사업)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제33조 삭제 (2011.5.30)	제6장 건축사협회	제31조(건축사협회) 제32조(사업) 제33조(주사무소와 지부) -

현 행		개 정 안	
	제34조 삭제 (2011.5.30) 제35조(위임 규정) 제36조(「민법」의 적용) 제37조 삭제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제38조의2(감독)		- 제34조(위임 규정) - 제35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제36조(감독) 제37조(「민법」의 적용)
〈신설〉	〈신설〉	제 6 장 의 2 건축사공제 조합	제38조(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2(이사회) 제39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0조(공제규정) 제41조(보증규정) 제42조(보험업법 적용의 배제) 제43조(지분의 양도) 제44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45조(조사 및 검사 등) 제46조(공제조합의 책임)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 6 장 의 2 보칙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6 장 의 3 보칙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 [중전의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11.5.30)] 제43조 삭제 (1984.12.31)	제7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 -

□ 제23조의3 담당건축사의 지정 등

[표 4-40]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안3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3조의3(담당건축사의 지정 등)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물의 설계업무를 담당할 건축사(이하 “담당건축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담당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며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p> <p>③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 <p>④ 담당건축사의 지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안이유
 - 수행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개요
 - 실제 업무를 담당할 건축사의 책임 및 권한을 규정
- 해설
 -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설계업무를 담당할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음
 - 담당건축사를 지정한 경우 해당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게 되며 본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는 자신이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
 - 담당건축사를 지정한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시
- 기대효과
 - 수임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소재 명확화와 합리적인 건축사 실적관리가 가능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2.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 제18조의4 건축사자격 국가 간 상호 인정

[표 4-41]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8조의4(건축사자격 국가간 상호 인정) ①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건축사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득자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 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 필요
- 개요
 - 외국 건축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
- 해설
 -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자격취득자가 우리나라 건축사와 업무 교류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자격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도록 함
 - 이때 상호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대효과
 - 국제 기준에 따라 외국건축사의 국내 건축서비스시장 진출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 입법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13.1.1.]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표 4-42]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개요

- 건축사법 제20조의1(건축사의 손해배상)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20조의1로 이전

□ 제20조의1 건축사의 손해배상

[표 4-4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20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0조의1(건축사의 손해배상) ①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p>

현 행	개 정 안
	<p>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여부를 착공신고 시에 확인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이 법 제39조에 따른 건축사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가입금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안이유
 - 건축사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험회사와 건축사공제조합 외의 공제기관을 통한 공제제도에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개요
 -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출대상, 허가권자의 확인 의무, 가입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
- 해설
 - 주로 민간 건축주로부터의 용역을 수행하는 건축사는 가입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기타 공제기관을 배제하고 손해보험회사 또는 건축사공제조합을 통해서만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를 발급받도록 명시

-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확인을 통한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
 - 기타 기관을 통해 공제를 받을 때 건축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방지
- 입법례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사업

[표 4-44]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제32조(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현 행	개 정 안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임차보증, 계약보증, 선금금 지급보증, 하자 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개요

- 건축사법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항제7호와 제2항~제6항을 법 제39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0조(공제규정), 제45조(조사 및 검사 등)로 수정하여 이전

□ 제38조 건축사 공제조합의 설립 등

[표 4-45]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8조(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建築士業)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④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및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안이유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개요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와 관련 기준을 규정
- 해설
 -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와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통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을 허용
 - 공제조합은 법인격으로 하며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하도록 규정
 - 조합원 자격과 임원·출자·융자·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
 - 공제조합의 인가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관 기재사항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종래의 건축사공제조합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조합원에게 배당금 지급 불가능, 등기 불가능, 세제혜택 불이익, 제한적인 사업 범위) 해소 가능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의2 이사회

[표 4-46]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8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8조의2(이사회) ① 공제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그밖에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요
 -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심의·의결·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
- 해설
 - 이사회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해 심의·의결 및 업무집행의 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
 - 이사회는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됨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공제조합의 사업

[표 4-47]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9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2.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업무수행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7.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② 공제조합은 그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 제안이유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기존 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 한계 해소 필요
- 개요
 -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해설

-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 ①손해배상책임 보장, 복지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공제 ②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 보수 등의 보증 ③조합원에 대한 자금 융자와 어음 할인 ④건축사 업무 관련 기술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교육 ⑤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편익증진 ⑥기자재 구매 알선 ⑦ 공제조합 목적 달성 관련한 사업 투자 ⑧기타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사업

- 공제조합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수행 허용

- 기대효과

- 보험, 보증, 금융 등 공제조합 고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제조합 위상 제고
- 근로자재해보험,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개발 및 서비스 제공
- 저렴한 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이익배당, 출자지분 상등을 통한 이익 환원으로 조합원인 건축사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가능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응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0조 공제규정

[표 4-48]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0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0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로,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요
 - 건축사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정 마련
- 해설
 -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함
 - 공제규정에는 사업 범위, 계약 내용, 공제로, 공제금, 책임준비금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로,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1조 보증규정

[표 4-49]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1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1조(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요
 - － 건축사공제조합이 보증사업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정 마련
- 해설
 - － 공제조합이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함
 - － 보증규정에는 사업 범위, 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책임준비금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2조 보험업법 적용의 배제

[표 4-50]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2조(보험업법 적용의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요
 - － 건축사공제조합의 공제사업에 관련된 개별법과의 적용관계를 설정

- 해설
 - 건축사법 제39조(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을 우선하도록 규정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조 지분의 양도

[표 4-51]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3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3조 (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개요
 - 조합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
- 해설
 -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를 함께 승계함

- 지분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상법의 기명주식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르도록 명시
-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의 방법에 따르도록 명시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제44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표 4-52]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4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4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공제조합에서 당연 탈퇴된 자가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공제조합에 요구한 경우 5.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p>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분의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p>

현 행	개 정 안
	<p>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p> <p>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 개요
 - 공제조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제조합이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 ①출자금을 감소할 때 ②조합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 시 필요할 때 ③자기 출자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지분 양수를 요구할 때 ④당연 탈퇴자가 출자액 회수를 목적으로 지분 취득을 요구할 때 ⑤준비금의 출자전입 시 단좌가 발생할 때
 - 단, ①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을 취득해야 하고 즉시 출자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나머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분의 출자증권을 공제조합 명의로 개서한 뒤 처분하되 미처분 지분은 정관에 따라 출자금 감소가 가능
 - 조합원 지분은 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시
 -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했을 때 정산금 청구권은 미행사 시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소멸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45조 조사 및 검사 등

[표 4-5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5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5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이 유지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39조제1항제1호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제2호의 보증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 제안이유

-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문제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 필요

- 개요
 - 건축사공제조합에 대한 조사나 감독에 관한 규정 마련
- 해설
 -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이 업무와 회계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법 제39조(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가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호에 따른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 관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 건축사법 제39조(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공제조합의 책임경영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축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회계 및 세무처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6조 공제조합의 책임

[표 4-54]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6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6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개요
 - 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공제조합의 책임 명확화
- 해설
 - 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공제조합에 대해 보증채권자가 가진 보증금 관련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2년 후에 소멸되도록 명시
- 기대효과
 - 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 예방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

[표 4-55]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47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요
 -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
- 해설
 -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표 4-56]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u>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u>계속교육</u>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안이유
 - 정부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때 그에 따른 비용 보조가 필요
- 개요
 -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위탁사업에 대해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법 제4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할 경우 업무 처리 및 운영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위탁사업과 관련한 협회 운영 원활화
- 입법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13.1.1.]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5. 건축사 징계제도 개정

□ 제30조의3 징계

[표 4-57] 건축사 징계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30조의3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24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p>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p>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24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p>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개요

－ 특별자치시장에 의한 건축사 징계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 제50조 벌칙

[표 4-58] 건축사 징계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를 한 사람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p>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를 한 사람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12.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및 해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안이유
 - 일부 법조항은 여타 전문직 특별법의 그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조정이 필요
- 개요
 - 기존의 건축사법 제52조(과태료) 중 강화되어야 할 항목 이전
- 해설
 - 기존의 건축사법 제52조(과태료)에 해당했던 ①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 ③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양형을 상향 조정
- 입법례

변호사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일부개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 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 제52조 과태료

[표 4-59] 건축사 징계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52조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아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p> <p>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p> <p>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p> <p>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p> <p>4.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p> <p>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p> <p>3.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 개요

- 건축사법 제50조(벌칙) 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항, 제2항제3호를 제50조로 이전

6. 기타

1) 실무교육 용어 변경

□ 제18조의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표 4-60] 실무교육 용어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18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계속교육 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개요

- 실무교육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문구 수정

□ 제30조의2 건축사의 계속교육

[표 4-61] 실무교육 용어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3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	제30조의2(건축사의 계속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계속교육 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p> <p>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p> <p>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p>	<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p> <p>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p> <p>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p>

- 제안이유
 - 건축사 자격 유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의 명칭 조정 필요
- 개요
 - ‘실무교육’이라는 용어를 ‘계속교육’으로 변경

2) 업무실적 제출 의무화

□ 제19조의2 업무 실적의 관리 등

[표 4-62] 업무실적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 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제안이유
 - 건축사의 업무실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 필요

- 개요
 - 건축사로 하여금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

3) 건축사 대가기준 확립

□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표 4-63] 건축사 대가기준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u>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u>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건축사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를 명문화한 규정 필요
- 개요
 - 기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타 기관이나 단체가 건축사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건축사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

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조건 변경

□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표 4-6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조건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을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p> <p>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삭제</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p> <p>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p>	<p>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건축사업(建築士業)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대표자를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p> <p>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을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p> <p>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삭제</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p> <p>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p>

현 행	개 정 안
<p>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p> <p>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p> <p>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p> <p>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p> <p>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p> <p>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p> <p>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개요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관련 조문 수정
- 해설
 - 건축사가 아닌 자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 사무소의 경우는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 제23조로 옮겨와 위임 입법 문제 해소

제5장 결 론

1. 연구 결론
2. 향후 과제

1. 연구 결론

- 대내외적인 면에서 국내 건축설계 산업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 대내적으로는 상위 1%의 대형 사무소가 설계산업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소형 사무소는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울 정도로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문제 심각
 - 대외적으로 국내 설계회사들의 해외진출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편이지만 대부분이 대형사무소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건설업의 해외 진출 현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계업은 아직 해외시장 진출이 미진한 편임
- 건축설계 산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발생으로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및 대처방안 모색 필요
 - 건축사는 여타의 전문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나 타 전문직 관련법이 업역 특성을 반영한 회사 형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온 것에 반해 건축사법은 이와 같은 대응이 미비

- 한미 FTA 체결 등으로 국내 건축설계 산업의 시장개방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가운데 이에 발 맞춰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이 필요
- 우리나라 건축설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
- 본 연구는 주요 주제별 현안에 대해 관련제도의 시대적 변화 양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사 법률 및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조문별로 건축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건축법인 제도 도입 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 건축사사무소들의 균형 발전, 이중과세 문제 해결, 합리적인 업무실적 관리를 위해 건축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건축사간의 협업도 가능한 새로운 회사형태인 건축법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기타 전문직의 경우 법령을 통해 법인 사무소에 대한 특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법인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건축법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검토
-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대안 제시
 - 첫 번째 대안인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을 전문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건축사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타 전문직 법률과 체계가 동일하여 건축사 위상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기존 법인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특히 감리회사를 겸한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분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
 - 두 번째 대안인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건축사들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유도와 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비건축사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전문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

- 세 번째 대안인 책임건축사 제도만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나머지 대안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개선안이지만 건축사에게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합리적인 업무실적 관리가 가능하여 신진건축가 육성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 1995년 WTO 및 GATS 가입과 1999년 UIA 북경총회의 건축사자격 국제기준 발표로 인해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 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5년제 건축학부 과정을 개설하고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최근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로 자격상호인정 관련 문제가 다시 부상
-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자격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진전된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건축사자격제도는 이미 UIA 권장안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 건축사의 국내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조문만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이로써 장래에 우리나라 건축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 현재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적으로 설립근거가 없으나 사실상 건축사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보증 및 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 공제조합은 속성상 영리조직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인 건축사협회의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으로는 배당금 지급, 자본금 및 임원 등기, 세제혜택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제조합의 한계와 문제점은 곧 협회 회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쉬움
- 다른 산업분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산업발전법」, 「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사공제조합도 법적으로 독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건축사법」상 공제조합 관련 법조문을 신설하여 운영

□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 건축사법 제정 이래 건축사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그 종류가 실무수련자 관리, 건축사보 신고 접수, 건축사 자격시험 관리, 등록 접수 관련 업무,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 계속교육의 6가지에 이르고 있음
- 의사, 사회복지사, 문화재수리기술자, 감정평가사 등과 같은 타 분야의 위탁사업은 일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사법은 위탁사업 종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가 전무한 상황
- 따라서 정부가 건축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건축사 징계제도 검토 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 건축사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징계 관련 조항은 그 처벌 수준이 여타 전문직 특별법의 그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거나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 양형을 상향 조정

□ 기타 사항

- 그밖에 ‘실무교육’ 용어를 ‘계속교육’으로 바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하며 효율적인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를 위해 실적 제출을 의무화함, 또한 건축사 대가기준과 관련하여 애매한 표현을 명확히 하여 건축사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조건을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화함

2. 향후 과제

- 단기간에 진행되는 수시과제의 속성상 건축사법과 건축사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를 근원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유의미하고 중대한 이슈를 발굴 및 도출하여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요청사항을 동시에 수용하여 검토하고 이를 온전히 반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다소 건축계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를 다루는데 그침
- 추후 건축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여건 변화 전망을 토대로 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심원하고도 본질적인 차원의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나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

참고문헌

□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 강강철(1988), “건축사협회에 바람”, 『建築士』, no.22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32~34.
- 강기세(1994), “부실시공:설계감리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건축』, v.38(10), 대한건축학회, pp.39~39.
- 강명구(1970), “올바른 건축을 위한 건축사법의 개정을”, 『建築士』, v.5(7),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6~7.
- 강성익(2012), “대한건축사협회, 새정부에 바라는 건축 어젠더”, 『건축』, v.56(12), 대한건축학회, pp.16~17.
- 곽수현(2012),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v.35 (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25~63.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국토해양부(2008), 『한미 FTA 자격상호인정 연구』, 국토해양부.
- 김광배(2006), “수련건축사의 등록요건은 어떠해야 하는가”,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53~59.
- 김광현(2006), “건축사등록원 설립을 서두르자”, 『건축문화』, v.297, 도서출판 에 이엔씨.
- 김무언(1990), “건축 3단체의 통합을 바라며”, 『建築士』, no.25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28~29.
- 김상균, 권문일(1993), “건축사연금의 형성과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21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1~35.

- 김상길(2007), “건축사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들”, 『건축과사회』, 통권 제10호, 새 건축사협의회, pp.64~76.
- 김상길(2009), “건축사법의 새로운 쟁점들”,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48~58.
- 김예상, 한미파슨스(2005), 『미국 설계 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서울:보문당.
- 김용미(2010), “건축 3단체 통합 무산 이후”, 『건축과사회』, 통권 제20호, 새건축사협의회, pp.10~12.
- 김재중(2010), “농협공제조합의 경영효율성과 생산성분석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청권(2012), “건축사 연금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建築士』, no.515,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 김홍수(2009), “건축사와 계속 교육과 자격 등록제도”,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80~82.
- 남윤옥, 이명주(2009), “한국 건축사법과 독일 건축사법 비교 분석”,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142~154.
- 대한건축사협회(1974), “건축사법개정건의서”, 『建築士』, no.71,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7~11.
- 대한건축사협회(1975), “건축사법의 개선”, 『建築士』, no.76,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2.
- 대한건축사협회(1990),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建築士』, no.251,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87~91.
- 대한건축사협회(1994), “건축사자격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建築士』, no.29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45~64.
- 대한건축사협회(1999), “국제건축사연맹(UIA) 베이징대회 참가보고”, 『建築士』, no.363,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58~65.
- 대한건축학회 편집부(2000),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 v.44(3), 대한건축학회, pp.10~34.
- 대한변호사협회(2010), 『한국 변호사백서 2010』, 대한변호사협회.
- 박상근(2002), “전문직을 위한 회사형태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555호, 법조협회, pp.236~271.
- 박세화(2002), “미국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v.8(2), 연세법학회, pp.135~156.

- 박세화(2007), “유한책임회사제도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법학연구』, v.48(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pp.1105~1128.
- 박인석(2006), “기존 건축사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 문제는 자정기능이다”,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78~80.
- 박인석(2009), “건축사의 법적 지위”, 『建築士』, no.486,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246~247.
- 서은영(2008), “공제조합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원태(2010), “건축사공제조합의 출범에 즈음하여”, 『建築士』, no.49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10.
- 송인방(2012), “개정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v.26(3), 한국기업법학회, pp.145~170.
- 안경봉(2010),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과 세법상 대응방안”, 『조세학술논집』, v.26(1), 한국국제조세협회, pp.445~483.
- 안기태(1985),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집단거부사건”, 『建築士』, no.19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36~41.
- 안우성(2006), “수련건축사의 최초 등록요건”,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53~59.
- 안우성(2009),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및 보증제도에 의한 건축사 업무 변화”,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104~107.
-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유전희(1996), “한국건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건축』, v.40(10), 대한건축학회, pp.46~49.
- 이관영(1997), “공정위 '건설사 설계허용'의 오류”, 『建築士』, no.339,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26~28.
- 이근철(2010), “전문건설공제의 리스크 측정에 관한 실증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문보, 최찬환(1995),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제정과 30년의 변천사”, 『建築士』, no.31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102~118.
- 이승우(1987), “건축사 보수교육 유감”, 『建築士』, no.21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6.
- 이재복(2008), “유사보험 감독일원화 시급하다”, 『일간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pp.7~20.

- 이종광(2009), “전문건설공제의 서비스품질과 미래경쟁력에 관한 실증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종정(1998), “건축사와 보증제도 - 공제사업 하루가 급하다”, 『建築士』, no.354,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84~86.
- 이종호(1999), “건축사들의 푸념”, 『建築士』, no.363,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70~71.
- 이철송(2013), 『회사법강의』, 제21판, 서울:박영사.
- 이충기(2006), “실무경력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가 - 실무수련제도와 실무수련경력 산정의 기준”,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33~48.
- 이충기(2006), “건축사등록원(가칭) - 새로운 건축사 관리제도”, 『건축과사회』, 통권 제3호, 새건축사협의회, pp.280~290.
- 이충기(2007), “건축사법 개정의 현실과 개정방향”, 『건축과사회』, 통권 제10호, 새건축사협의회, pp.36~41.
- 이필훈(2006), “건축사등록원의 목적과 주체”, 『건축과사회』, 통권 제4호, 새건축사협의회, pp.28~32.
- 이호진(1994), “건설업체의 건축사업 진출 시도에 대해 - 건축사의 소명과 위치”, 『建築士』, no.300,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18.
- 이훈중(2005),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pp.301~318.
- 장양순(2000), “건축사에 대한 노동부의 인식”, 『建築士』, no.370,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16~17.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통계연보』.
- 전영철(2009),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82~88.
- 정태용(2009), “건축사 자격제도 변화와 대학원 건축 교육 프로그램”, 『건축과사회』, 통권 제15호, 새건축사협의회, pp.36~41.
- 주남철(1986), “건축사학의 연구와 교육 등: 건축사와 건축사시험”, 『건축』, v.30(5), 대한건축학회, pp.41~43.
- 최관영 등(1999),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분야”, 『건축』, v.43(12), 대한건축학회, pp.29~34.
- 최창규(1979), “건축사 보수의 허와 실”, 『建築士』, no.123,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12~15.

최창규(1987),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하는데...”, 『建築士』, no.225,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34~35.

최창규(1988), “이 시대 건축사들의 독백 - 건축사 국가고시를 중심으로”, 『建築士』, no.22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p.32~34.

한중언(1985), “건축사사무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建築士』, no.198, 서울:대한건축사협회, p.4.

한미 FTA 협정문

櫻井 隆(2008), “合同會社の法的性質”, 『經營論&叢』, v.18(1), 文京學院大學.

Architectural Record(2013), *Top 300 Architecture Firms*.

ENR(2013),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ENR(2013), *The Top 150 Global Design Firms*.

NCARB(2012), *Certificate Guidelines*.

□ 신문기사

“개정 건축사법의 문제점”, 『건설경제』, 2011년 5월 24일.

“건교부, 건축사법 개정안 마련”, 『연합뉴스』, 1998년 4월 30일.

“건설공사 보험 의무가입 대상 대폭 확대”, 『연합뉴스』, 1994년 10월 27.

“건설관련 법령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 『연합뉴스』, 1994년 10월 24일.

“건설 부동산 관련협 을 주요 사업계획(하)”, 『매일경제』, 1993년 2월 22일.

“건설사 설계검업 현실로, 건축사 쓰나미 경보”, 『건축사신문』, 2009년 9월 9일.

“건설사 설계허용, 건축사 생존대책부터 세워라”, 사실, 『건축사신문』, 2009년 5월 11일.

“건설사 설계허용 반기든 대한건축사협회 한명수 회장”,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4일.

“건설업체 건축사협 설계범위 놓고 티격태격”, 『매일경제』, 1997년 9월 12일.

“건설업체 건축설계범위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2009년 7월 14일.

“‘건설업체 설계 검업’ 건축업체와 갈등 재점화”, 『서울경제』, 2005년 10월 31일.

“건축교육 세계화’ 건축계 발등의 불”, 「한겨레」, 1999년 7월 15일.

“건축사 감리소홀심각”, 「한겨레」, 1995년 7월 4일.

“건축사, 공제업무 전담부서 신설”, 「건축사신문」, 1999년 4월 16일.

“건축사 공제조합 만든다 대한건축사협회”, 「매일경제」, 1997년 8월 25일.

“건축사 단체 통합 추진 합의”, 「건축사신문」, 2008년 1월 9일.

“건축사 대가기준 마련해야”, 사설, 「건축사신문」, 2001년 4월 25일.

“건축사등록원 별도 설립 안 된다”, 「건축사신문」, 2006년 8월 7일.

“건축사등록원 설치위한 건축사법 개정 추진”, 「건축사신문」, 2006년 8월 7일.

“건축사법 개악 일단 저지”, 「건축사신문」, 2001년 12월 27일.

“건축사법 개정과 건축사협회”, 사설, 「건축사신문」, 2000년 3월 25일.

“건축사법 개정 시행령보류 진정”, 「동아일보」, 1965년 3월 30일.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사신문」, 2001년 7월 25일.

“건축사법 개정 진통”, 「매일경제」, 1993년 4월 3일.

“건축사법령 개악 추진 필사저지 결의”, 「건축사신문」, 2001년 11월 27일.

“건축사법 전면개정은 시대적 요청”, 사설, 「건축사신문」, 2002년 11월 5일.

“건축사법 제38조 시대착오”, 「건축사신문」, 2000년 9월 26일.

“건축사사무소 등록경신”, 「동아일보」, 1985년 6월 27일.

“‘건축사사무소’ 명칭 계속 의무사용키로”, 「파이낸셜뉴스」 2009년 8월 25일.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 사용 폐지 추진”, 「건축사신문」, 2009년 8월 10일.

“건축사 업역 도대체 어디까지 빼앗겨야”, 「건축사신문」, 2009년 9월 9일.

“건축사 없는 건축사법”, 사설, 「건축사신문」, 2000년 11월 24일.

“건축사자격시험 근본적재검토를”, 「동아일보」, 1965년 4월 24일.

“건축사자격시험 보이콧”, 「경향신문」, 1965년 4월 21일.

“건축사 죽이기 개악입법, 두고 볼 건가”, 사설, 「건축사신문」, 2009년 9월 9일.

“건축설계 감리 적정대가 확립 및 양질 서비스 제공돼야”, 「건축사신문」, 2002년 7월 3일.

“건축업계 다시 뭉친다 ‘한국건축가연합’ 출범 시동”, 「아시아경제」, 2013년 1월 24일.

“건축학 5년제 학부과정 도입”, 「매일경제」, 2001년 1월 22일.

“‘건축 3단계’ 통합의 변수”, 「건축사신문」, 2009년 6월 8일.

“경기침체로 주택신축 크게 줄어 합동건축사사무소 난항”, 「매일경제」, 1979년 4월 9일.

“공제사업추진 건축사협회”, 「매일경제」, 1998년 9월 9일.

“공제조합 설립 추진 연금폐지 회비제도 개선도 건축사협회”, 「매일경제」, 1995년 6월 27일.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은 시대적 요구”, 「건축사신문」, 1999년 12월 22일.

“국내 설계시장 내년 개방”, 「연합뉴스」, 1995년 5월 12일.

“‘김앤장’ 변호사 500명 넘었다”, 「법률신문」, 2013년 6월 18일.

“내년 중 건축사법 개정기로”, 「연합뉴스」, 1992년 10월 7일.

“단체통합 및 정관개정안 부결 충격”, 「건축사신문」, 2009년 11월 11일.

“대졸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갖춰야 응시자격 건축사시험 자격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2008년 6월 13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열려”, 「건축사신문」, 2010년 12월 16일.

“대형건설사 설계 허용 원천 차단돼야”, 「건축사신문」, 2009년 4월 8일.

“변호사등 전문직 보수 수수료 자율화 23개 카르텔 내년 폐지”, 「경향신문」 1998년 7월 24일.

“부실해진 건축”, 「매일경제」, 1965년 12월 5일.

“보수기준 자체결정 변호사-건축사법등 - 공정위 경제 담합구조 대수술”, 「조선일보」, 1997년 3월 19일.

“사무소 개업 관계없이 자격증소지자 가입허용”, 「매일경제」, 1995년 2월 6일.

“서민주택 최고 53%”, 「동아일보」, 1976년 7월 1일.

“설계 감리비 가이드라인 유지를 - 대한건축사협회 토론회”, 「서울경제」, 2005년 3월 15일.

“설계건축사에 의한 감리 보장해야 한다”, 「건축사신문」, 2004년 5월 7일.

“설계활동분야 넓혀야, 건축사협서 건의할 방침”, 「매일경제」, 1967년 11월 8일.

“세계적 건축물 짓기 위해 설계 시공 발주제도 개선돼야”, 「건축사신문」, 2006년 5월 8일.

“시공보험 가입대상 확대”, 「매일경제」, 1994년 10월 27일.

“野의원 건축사예비시험 자격완화 추진”, 「연합뉴스」, 2005년 2월 7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비 깎아먹기 중단하라”, 사설, 「건축사신문」, 2011년 9월 16일.

“측량취급 등 못해 건축설계사무소 정비지침 마련”, 「경향신문」,
1970년 11월 23일.

“특전은 싫다”, 「동아일보」, 1965년 4월 28일.

“폭풍우 견딜 건축사 등지를”, 「한겨레」, 2002년 10월 12일.

“현재, 건축사법 28조 1항2호는 위헌”, 「연합뉴스」, 1995년 2월 24일.

“2005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강화”, 「매일경제」, 2000년 8월 8일.

An Institutional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s Act

Yu, Kwang Heum
Lim, Yoo Kyoung
Youm, Chirl Ho
Jin, Hyun Young

Due to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and increased pressure on opening the architecture industry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n architecture sector faces a difficult period. The current architect related systems do not effective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and also are unable to reflect the distinct professional qualities of an architect (architects). These institutional problems are becoming a major cause of weakening competitiveness of architects who are responsible for securing people's safety and property. Recognizing such issu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architect related institu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rchitectural industry. The four main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ure firm which recognizes the architect as a distinct profession, the formation of a system which supports Korean architects entering overseas markets,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s mutual benefit association, and the provision of a legal basis for financial support in government commissioned projects.

The first issue i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ure firm. Insofar, to achieve reasonable tax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architectural company, the need for architect's independent working condi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ure firm which ensures

collaboration between individual architects have been proposed. Other professions have already legally established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procedures, taxation regulations regarding the setup of their own firms. Therefore, in regards to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ure firm which is applicable in Korea,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First is to convert existing incorporated companies into professional firms. Second, to legalize existing architecture incorporated companies, and finally to adopt a system which allows for the recognition of responsible architects.

The second issue is related to the system dealing with Korean architects entering overseas marke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uch system is emphasized during such circumstances,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member of WTO and GATS, when the UIA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is released and after the agreement of the FTA.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US and EU, Korea's FTA partners, are tentative in mutually recogniz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he study proposed to legally minimize the mutual recognition of architecture qualifications amongst different countries in the Architects Act.

The third issue i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rchitect's mutual benefit association. Currently, where there are no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association, and where a mutual association is practically operated by KIRA(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 legal provis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chitect's mutual benefit association is needed.

The last issue is related to the legal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government commissioned projects. Through continuous amendment of the Architects Act various project typ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legal framework, and in total there are six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commissioned projects run by KIRA today. However, legal provision regarding the financial support of these projects has not yet been made. In other sectors where there are less number of types of government commissioned projects, regulations regarding financial support are already in place. Hence, the study suggested the stipulation of financial support in the Architects Act in order to provide stable working conditions for architects involved in government commissioned projects.

As a conclusion, this study revised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directly related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so that this could be reflected in the amendment of the Architects Act. The limits of the study however are, due to the short amount of time given for the project, that the overall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rchitect related systems could not be examined, and that a wider stakeholders' opinion could not be assembled. In future, mor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of architect related systems can be drawn through in-depth interviews or surveys, and subsequent studies regarding these issues should be followed.

keyword : Architects Act, architecture firm,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architecture, architect's mutual benefit association

부록.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¹⁹⁸⁾

1. 개정이유

새로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 건축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건축법인 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 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하는 등 미비된 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내 건축 설계산업을 국제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안 제23조의3 신설)

대표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고, 담당건축사는 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19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55호(2013.12.17)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고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

나. 건축법인 설립근거 마련 (안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다. 전문자격 상호인정 (안 제18조의4 신설)

FTA등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근거를 마련함.

라. 건축사공제조합 분리(안 제39조에서부터 제45조까지 신설)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의 책임성 보장을 위해 건축사협회 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함.

마. 그 밖에 개정한 사항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함.

(안 제19조제2항제6호 신설)

○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타 입법례에 따라 명확히 함.

(안 제19조제2항제7호 개정)

○ 건축사자격시험 관리 등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 건축사 실무교육 명칭을 “건축사 계속교육”으로 변경함.

(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30조의2제1항및제2항, 제38조의3 제2항제6호 개정)

○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개정에 따라 용어 순화함.
(안 제9조제1호 개정)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실무교육”을 “계속교육”으로 한다.

제3장의2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건축사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건축사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득자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제23조제1항 중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을 “건축사업(建築士業)을 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대표자를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담당건축사의 지정 등)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물의 설계업무를 담당할 건축사(이하 “담당건축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담당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며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담당건축사의 자격요건,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건축사의 실무교육)”을 “(건축사의 계속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교육”을 각각 “계속교육”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3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2항의 제6호 중 “실무교육”을 “계속교육”으로 한다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하고 “제39조”를 “제46조”로, “제40조”를 “제47조”로, “제41조”를 “제48조”로 한다.

제7장 건축사공제조합(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建築士業)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2.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업무수행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그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1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및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보험업법 적용의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40조제1항제1호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5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제19조제2항제6호및제7호, 제30조의3제3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법인건축사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법인건축사사무소는 개정규정 제23조 후단에 따른 법인건축사사무소로 본다.

제4조(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분리하여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축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 등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 9 조 (결 격 사 유) -----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 계속교육-----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조의4(건축사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건축사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득자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내용) ① (생략)	제19조(업무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건축사업(建築士業)을 하려는 자는 ----- ----- ----- ----- 이 경우 법인은 그 대표자를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제23조의3(담당건축사의 지정 등)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물의 설계업무를 담당할 건축사(이하 “담당건축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담당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며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담당건축사의 자격요건,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건축사의 계속교육) ① ----- ----- ----- ----- ----- ----- 계속교육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계속교육-----.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징계) ①·② (생략)	제30조의3(징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 1 조 의 2 (사 업) ----- ----- -----

현행	개정안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금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용자를 위한 공제사업	〈삭제〉
8. (생략)	7. (현행 제8와 같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금, 공제로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현행	개정안
<p>〈후단 신설〉</p> <p>1. ~ 5. (생략)</p> <p>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p>	<p>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30조의2에 따른 계속교육</p>
<p>〈신설〉</p>	<p>제7장 건축사공제조합</p>
<p>〈신설〉</p>	<p>제39조(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p> <p>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建築士業)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④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p> <p>2.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금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p> <p>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업무수행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p> <p>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p> <p>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p>

현행	개정안
	<p>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p> <p>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의 구매예산</p> <p>7.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p> <p>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공제조합은 그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신설〉	<p>제41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신설〉	<p>제42조(보험업법 적용의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신설〉	<p>제43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40조제1항제1호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제45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39조(생략)	제46조(현행과 같음)
제40조(생략)	제47조(현행과 같음)
제41조(생략)	제48조(현행과 같음)